촛불 2 혁명 주년 학술 토론회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

키워드 자유와 평등 / 국가와 개인

일 시 2018. 11. 2.(금) 13:30~18:00

장 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당(6층)

주 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촛불 2 혁명 주년 학술 토론회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

키워드 자유와 평등 / 국가와 개인

일 시 2018. 11. 2.(금) 13:30~18:00

장 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당(6층)

주 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

촛불 혁명 2주년 학술 토론회

시간	내용	사회
13:30 ~ 13:45	개회식 인사말 지 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종률
13:45 ~ 14:45 (60')	**제1부 기조발제** **주제**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_ 저항의 시대에서 형성의 시대로 김상봉 철학, 전남대	신형식
14:45 ~ 15:00	휴식	
15:00 ~ 16:00 (60')	**제2부 주제발표** **발표 1** 촛불 이후,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관후 정치학, 서강대 **발표 2** 노동과 성평등, 그리고 돌봄 민주주의 윤자영 경제학, 충남대	김만권 정치철학
16:00 ~ 16:15	휴식	
16:15 ~ 17:45 (90')	**제3부 종합토론** 발표자 김상봉, 이관후, 윤자영 토론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문의 031-361-958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촛불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오늘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촛불혁명 2주년 학술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따듯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농락하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일어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6월항쟁이 대통령 직선제, 언론의 자유 보장 요구 등 '자유'의 문제에 집중했다면, 촛불혁명은 '이게 나라냐?'고 물으며 헬조선의 원인과 실체에 접근한 '평등'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화두였습니다. 또 '국가'의 존립이 목적이고 국민은 수단이라는 전도몽상을 깨트리고, 국민의 행복이 목적이고 국가는 이를 달성하는 수단에 불과함을 자각한 '시민'의 정치적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학술토론회가 주제로 내 건 것처럼 촛불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발표 글 '저항의 시대에서 형성의 시대로'를 닦고, 깁고, 다듬었을 기조발제자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 교수님은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를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발한 학술연구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압니다. 특히, 부마항쟁과 5 · 18광주항쟁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문제의식이 돋보이는 논문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는 이관후 박사님이 발표할 '촛불 이후,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라는 글과 한국의 경제-노동 문제와 성평등 문제에 천착해 오신 윤자영 충남대 교수님의 발표문 '노동과 성평등, 그리고 돌봄 민주주의'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또 오늘 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님과 바쁜 활동 중에도 기꺼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님,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님, 그리고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촛불혁명을 뒷받침한 퇴진행동의 해체 이후, 우리 사업회는 촛불혁명의 역사적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최하는 학술토론회도 해마다 정기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학술토론회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과 개인의 행복이 보장되는 '새로운 나라' 건설을 폭넓고, 깊게 논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을 따라 우리의 민주주의도 잘 여물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1월 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 선

촛불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

촛불혁명 2주년 학술토론회

기조발제 **저항의 시대에서 형성의 시대로 〈촛불혁명에 대하여〉** 김상봉 철학, 전남대

1. 전쟁상태에서 정치적 상태로 ····· 11
2.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혁명인가? ····· 14
3. 반동적 퇴행은 가능한가? ····· 15
4. 열등감의 극복 ····· 17
5. 저항에서 형성으로의 이행 ····· 20
6. 권리에서 만남으로 ····· 21
7. 왜 남과 북 사이의 길이 가장 처음 열렸는가? ····· 22
8.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은 무엇인가? ····· 23
9.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기업국가의 미래 ····· 24
10. 새로운 나라의 형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25

주제발표 1 **촛불 이후,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관후 정치학, 서강대

1.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와 오늘의 과제 ····· 29
2. 촛불은 무엇이었는가? ····· 32
3. 촛불 이후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 ····· 34

주제발표 2 **노동과 성평등, 그리고 돌봄 민주주의** 윤자영 경제학, 충남대

1. 들어가는 말 ····· 39
2. 노동과 성평등 ····· 40
3. 돌봄 민주주의 ····· 43
4. 맺음말 ····· 45

종합토론 1 **김상봉,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_저항에서 형성으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 전쟁상태에서 정치적 상태로 ····· 49
2. 혁명인가? 불가역적인가? ····· 50
3. 서로주체성, 형성, 공속 ····· 51
4. 이론의 총체성과 주체의 이념 ····· 53
5. 촛불의 고유성과 보편성, 가능성과 위기 ····· 54
〈보론〉 촛불혁명과 자유롭고 위태로운 세계의 시민들 ····· 55

종합토론 2 **촛불 이후, 정치적인 것들의 정치적 귀환**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1. 혁명 그 이후, 여성은 어디에? ····· 61
2. 혁명의 젠더 정치 ····· 62
3. 정치적인 것들의 정치적 귀환 ····· 65

종합토론 3 **돌봄적 혁명, 정원을 가꾸는 마음으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1. 시간의 축 ····· 68
2. 존재들의 재위치 ····· 69
3.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 70
4. 민주주의의 정원을 일궈나갈 때 ····· 71

기조발제

촛불혁명 2주년 학술토론회

저항의 시대에서 형성의 시대로
<촛불혁명에 대하여>

김상봉 철학, 전남대

저항의 시대에서 형성의 시대로

김상봉 철학, 전남대

"죽지 않아야 할 사람이 죽었으니 머지않아 운명의 여신은 그 핏값을 받기 위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들이 그에게 적용했던 그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하려면 우리 자신이 정화되어야 할 것이니, 역사는 그렇게 쇄신되는 것이다."[1)]

1. 전쟁상태에서 정치적 상태로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이지만 2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본다 하더라도 촛불혁명이 21세기 한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연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되리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사건이 이 나라의 역사에서 하나의 완성인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표시하는 이정표가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이 아니라 민중의 입장에서 지난 2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나라의 역사는 한 마디로 말해 항쟁의

1) 김상봉, 「한 시대의 종말을 애도함」, 『한겨레신문』, 2009년 5월 25일자. 이 글은 故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을 애도하는 조사였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56772.html#csidxe203a80114cf726ae5eb3bc7d02c4dd

역사이다.[2] 국가가 모든 겨레의 서로주체성(allelo-subjectivity)[3]의 현실태가 되지 못하고 민중 위에 폭력적으로 군림하는 홀로주체성(mono-subjectivity)의 현실태에 지나지 않을 때, 자유로운 주체로서 자신을 정립하려는 민중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먼저 해야 할 일은 수탈기구로 전락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일 수밖에 없다.[4] 이 문제를 자유와 주체성의 관점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데카르트 같은 자유인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는 단순한 자기긍정을 통해 자기를 주체로서 정립할 수 있지만, 사로잡힌 노예는 먼저 자기를 지배하는 주인인 타자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자기를 자유로운 주체로서 정립할 수 없는 것이다.[5] 우리는 이로부터 민중항쟁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거니와, 한국의 민중항쟁의 역사란 간단히 말하자면 이 땅에서 자유로운 주체로서 더불어 살기 원하는 민중들이 한 줌의 지배계급에 의해 찬탈된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6] 나아갔던 길고도 고통스런 투쟁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홍경래의 난으로부터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한국의 민중항쟁은 그 유형에서 크게 셋으로 나뉜다. 하나는 동학농민전쟁처럼 폭력적인 무장 항쟁이고, 다른 하나는 3.1운동처럼 비폭력적인 저항이며, 마지막 하나는 전태일의 경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자기 폭력의 유형이다. 이 마지막 유형은 폭력 없는 저항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폭력적인 봉기도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여 그 두 가지 항거의 길이 모두 막혔을 때 선택하게 되는 제3의 길로서 적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극단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형에 제주4.3 당시 제주도민들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를 거부했던 것을 또 다른 유형으로 보탤 수도 있겠는데, 이 경우 4.3은 권력에 의해 강요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적극적 무위(無爲)의 저항'이라고 유형화해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이 나라의 민중항쟁은 한편에서는 현존하는 국가체제를 부정하면서 다른

---

2) 1811년 서북지방을 뒤흔든 홍경래의 난에서 시작해, 1862년 봄부터 산청과 진주를 필두로 여러 달 동안 삼남지방과 바다 건너 제주까지 이어졌던 임술민란을 거쳐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에 이르기까지, 19세기 조선 역사는 크고 작은 민중항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런 양상은 안중근으로 대표되는 구한말 의병전쟁을 거쳐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나 해방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왔는데, 그 과정에서 멀리는 3.1운동부터 5.18을 거쳐 최근의 촛불혁명까지 근·현대 한국의 역사는 가히 민중항쟁의 역사박물관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양한 항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3) 서로주체성이나 홀로주체성은 국어사전에 없는 낱말로서, 내가 벌써 20년 전 『자기의식과 존재사유-칸트철학과 근대적 주체성의 존재론』(한길사, 1998)에서 칸트의 주체 개념을 비판하면서 처음 제시했던 개념이다. 서로주체성의 영어 표현인 allelo-subjectivity 역시 영어사전에 없는 말로서 나는 후설과 이후 현상학에서 말하는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내가 말하려는 서로주체성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그리스어의 상호대명사(pronomen reciprocum)의 어간(□λλ□λ-)을 사용하여 allelo-subjectivity라고 표현한다. 라틴어의 inter가 사물적 관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관계를 함의한다면 그리스어의 상호대명사는 원칙적으로 인격적 관계만을 표현하는 낱말이기 때문이다. 자기의식의 본질이 '나=나'라고 하는 자기동일성에 존립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너'라고 하는 타자와의 만남에 있다는 서로주체성의 온전한 의미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자기의식과 주체성이 흔히 생각하듯이 고립된 자기관계에 존립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너와의 만남 속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 서로주체성의 진리이다. 내가 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나 속에 또 다른 주체인 너를 품을 때만 온전한 내가 된다."(『자기의식과 존재사유』, 369쪽) "그리하여 나의 자기의식은 언제나 나와 너의 서로주체성으로서 발생한다. 그런 까닭에 나의 자기의식은 언제나 우리의 의식으로서만 발생하는 것이다."(『자기의식과 존재사유』, 362쪽.) 그런데 여기서 "나와 네가 만나 우리가 된다는 것은 나와 네가 우리 속에서 자기의 주체성을 전적으로 양도하고 객체로 전락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 서로주체성은 한편에서는 나와 네가 서로 만나 보다 확장된 주체인 우리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이름인 동시에 나와 네가 서로서로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나와 네가 우리에 대해 동등한 주체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이 두 번째 계기를 명확히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공동주체성이 아니라 서로주체성이란 이름을 사용한다."(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 234쪽) 그런데 '나'라는 것이 개별적 주체의 이름이라면 '우리'는 집단적 주체로서 공동체의 이름일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사회적 실체(social entity) 또는 사회구성체는 개인의 집합도 아니고 비인격적인 구조도 아니며, 오직 공동체이다.(김상봉, 『학벌사회-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그러므로 주체의 진리가 홀로주체성이 아니라 서로주체성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공동체의 온전함 역시 서로주체성에 존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민들이 서로주체성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김상봉 외, 『다음 국가를 말하다-공화국을 위한 열세가지 질문』, 웅진지식하우스, 2011, 119쪽) 것이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온전함 역시 서로주체성에 존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기구는 그런 서로주체성의 현실태로서 "우리 모두의 나라"가 아니라 홀로주체성에 입각한 "그들의 나라"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모든 국가 폭력과 민중 항쟁이 생겨났던 것이다.

4) 이처럼 한국의 민중항쟁사를 홀로주체성과 서로주체성의 범주를 통해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상봉, 『철학의 헌정-5.18을 생각함』(도서출판 길, 2015)을 참고하시오.

5) 김상봉, 「함석헌과 주체성의 문제」, 『철학연구』 제84집. Kim et al., "Homo resistens"

6) 김상봉,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두 개의 나라 사이에 있는 5.18」, 『철학의 헌정-5.18을 생각함』, 97쪽 아래 참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의 형성”[7] 또는 “새로운 국가”[8] 또는 “참된 나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9] 부정과 형성은 민중항쟁의 본질적 두 계기이다. 그리고 여기서 형성의 직접적 주체가 누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모든 인민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체로서 새로운 국가 형성에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민중의 뜻과 요구에 따라 부단히 기존의 국가가 보다 참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10] 그리고 이처럼 단순히 불의한 국가를 부정하거나 사회공동체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것 자체를 목표 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고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 나라의 민중항쟁은 한갓 테러나 폭동과 구별된다.[11]

그런데 이 형성의 역사에서 지난 촛불혁명은 하나의 완성과 새로운 시작을 표시하는 사건이라 생각된다. 그 까닭은 다른 무엇보다 촛불혁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민중봉기와 항쟁의 양상 또는 형식이 일종의 질적 전환을 이루었다는 데 있다. 지난 200년 동안 한국의 역사가 부단한 민중항쟁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이 나라에서 국가기구가 인민의 서로주체성의 현실태가 아니라 겨레로부터 소외된 홀로주체적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인민의 자발적인 동의와 지지 위에 그 권력의 정당성을 두고 있지 않은 까닭에 오직 물리적 폭력을 통해서만 권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국가권력과 인민의 관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적 분류에 따른다면[12] 동등한 시민들 사이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의 시민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지배-피지배 관계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누구도 자발적으로 노예상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기구와 민중 사이에는 잠재적인 전쟁상태가 조성된다.[13]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민중이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해서 봉기할 때, 민중과 국가 기구 사이의 잠재적 전쟁상태는 현실적인 항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민중항쟁을 관통하는 근본 문법이다.

그런데 촛불혁명은 심각한 사회적 대립상황에서 촉발되었으나 그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으로 시작되고 평화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촛불혁명이 처음에는 항쟁으로 시작했으나 마지막에는 항쟁을 지양해버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비폭력적 저항은 민중항쟁의 여러 유형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정치적 상태 속에 있는 국가에서라면, 인민이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항쟁으로 비화되어야 할 까닭은 없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라면 시민들의 평화적인 의사표시가 항쟁이라고 규정되어야 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설령 그 의사표현의 내용이 현존하는 통치 권력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상적 정치상태 속에 있는 국가라면 그 요구는 국가의 주권이 기초하고 있는 인민의 요구이므로 그 자체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이 항쟁이 되는 까닭은 민중의 평화적인 의사표현에 대해 국가기구가 폭력으로 응답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3.1운동에서부터 4.19를 거쳐 부마항쟁과 5.18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때마다 국가기구는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했던 까닭에 정치적 행위로 끝날 수도 있었던 시위가 항쟁으로

---

7)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두 개의 나라 사이에 있는 5.18」, 『철학의 헌정』, 51쪽.

8) 「항쟁공동체와 지양된 국가-5.18공동체론을 위한 철학적 시도」, 『철학의 헌정』, 109쪽.

9) 같은 글, 같은 책, 114쪽.

10) 더러는 그람시(A. Gramsci)가 이탈리아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했던 수동적 혁명(rivoluzione passiva)의 개념을 한국의 민중항쟁사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박명림, 『다음 국가를 말하다-공화국을 위한 열세가지 질문』, 169쪽 아래 참고) 이는 한국의 민중항쟁이 실패나 패배로 끝난 외적인 현상에만 주목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직접적 욕구가 그대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항쟁이 실패로 끝났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단절적 비약을 통해 발전할 수 없으며, 민중은 좌절과 실패를 통해 내면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시적으로 보자면 한국의 역사는 반복되는 민중항쟁을 통해 외적으로는 진보해왔고 내적으로는 성숙해왔던 것이다.

11) 김상봉, 「항쟁 공동체와 지양된 국가」, 『철학의 헌정』, 108쪽. “항쟁은 국가기구를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폭동과 다르지 않지만 반드시 공동체를 지향하거나 형성한다는 점에서 폭동과 다르다.” 109쪽. “그런 까닭에 항쟁은 언제나 참된 공동체를 위하여 일어난다. 그 공동체는 국가공동체이다. 항쟁이 현존하는 국가를 부정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가공동체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를 욕구하기 때문이다.”

12) 아리스토텔레스, 김재홍 옮김, 『정치학』,(도서출판 길, 2017) 제1권 참고.

13) 김상봉,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두 개의 나라 사이에 있는 5.18」, 『철학의 헌정』, 45쪽 아래

비화되었던 것이다. 이번의 촛불혁명 역시 통치 권력에 대한 거부였다는 점에서 보자면 그 시작은 기존의 항쟁과 다르지 않았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에 대해 계엄령 같은 것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촛불혁명 역시 항쟁에서 시작해 항쟁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그런 기도를 허락하지 않을 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 사회는 민중과 국가기구 사이의 본질적 전쟁상태로부터 정치적 상태로 이행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정치적 상태란 한 사회 내의 가능한 모든 차이와 대립이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14)]

2.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혁명인가?

촛불혁명은 4.19나 6월항쟁처럼 헌법적 체제를 바꾼 사건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혁명은 프랑스혁명이나 러시아혁명과 같은 의미의 혁명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촛불항쟁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까닭은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 무언가 특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앞에서 말한 것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 촛불혁명이 초래한 외적 변화는 평화적인 의사표시와 정해진 법에 따른 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다. 그것은 비정상으로부터 정상적인 상태로의 이행, 비상식으로부터 상식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소박하고도 상식적인 정치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는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나는 항쟁의 역사를 살아왔다. 그 역사는 앞서 말했듯이 가히 민중과 국가기구 사이의 전쟁상태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극이었다. 그런데 촛불혁명은 전쟁상태로부터 정치적 상태로의 이행을 완수함으로써 그런 비극적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다. 우리는 이것 자체가 촛불혁명이 이룬 혁명적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혁명적 의의는 단지 외적인 의미에서 민중이 요구해 온 정치적 질서가 수립되었다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의미는 촛불혁명을 통해 실현된 정치적 진보가 사회 전체의 성숙 또는 겨레의 내적 성숙의 자연스런 결과라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숙'이야말로 우리가 촛불혁명에서 가장 먼저 읽어낼 수 있는 역사적 의미이다. 그 성숙의 결정적인 외적 징표는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일관되게 견지했던 평화이다. 하지만 민중이 평화적으로 요구한다 해서 국가 기구가 평화적으로 그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계엄령을 기획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일이다. 하지만 그 시도는 성공할 수 없었다.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 앞에서 국가 폭력을 동원하고 싶어도 동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까닭을 생각하면, 군대나 경찰 그리고 정부 기구 역시 민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군대를 움직일 수 없었던 까닭은 국가 기구의 불법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한국의

14) 물론 평화적 갈등해결이란 정치적 상태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김상봉 외, 『다음국가를 말하다-공화국을 위한 열세가지 질문』, 145쪽. "이런 상황을 엄밀하게 규정하기 위해, 우리는 국가 내부의 전쟁상태와 정치적 상태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동과 대립이 원칙적으로 구성원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적 선을 두고 발생하는 것일 때, 대립의 당사자들은 서로를 선의의 경쟁자로서 존중할 수 있고, 대립조차 공공적 선을 위해 이바지하게 됩니다. 국가 내부의 갈등이 이렇게 발생하고 조정되는 한에서 그 국가는 정치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립이 순전히 사적인 이익의 충돌에서 발생하고, 그 결과 대립의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적으로 간주할 때 국가는 내부적으로 전쟁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민중이 전체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는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용되고 처리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예전 같았으면 다시 민중과 국가 기구의 현실적 상쟁으로 치달았을 수도 있는 항쟁이 평화적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촛불혁명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진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신적 성숙을 증명한 사건이다.

모든 성숙이 그렇듯이 이것 역시 한 순간에 가능했던 비약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을 혁명하는 것과 나의 내면을 쇄신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것은 동학 이래 면면히 이어져 온 한국의 민중항쟁의 두드러진 고유성이었다. 동학농민전쟁의 뿌리가 단순한 정치 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철학적 세계관이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의 민중항쟁의 정신성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같은 사태를 반대쪽에서 고찰한다면 종교나 철학의 혁명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학부터 민중 신학에 이르기까지 종교나 철학 같은 정신적 삶의 원리가 정치적 혁명과 결합할 수 있고 또 결합해 왔다는 것이야말로 한국 근·현대 민중항쟁사의 고유한 성격이다. 우리는 이런 성격을 "혁명적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15] 이는 특히 근대 이후 동학 이래 한국의 민중항쟁을 관통하는 두드러진 개성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사회적 진보의 과정을 단순히 외적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동시에 내적 성숙으로 만들어준 안팎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구한말의 열렬한 신교육운동이나 7~80년대 야학운동을 생각해보라. 전자는 3.1운동과 뗄 수 없고 후자는 그 시대 노동운동의 성장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정치적 운동이 민중의 자기 교육과 결합되어 있었던 것은 한국의 민중항쟁사의 두드러진 개성이다.[16] 겨레의 그런 진지하고도 열성적인 자기교육과 자기계몽의 과정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지배계급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방해와 일시적 퇴행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속적으로 진보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학 이후 한국의 민중항쟁의 역사와 그 끝자락의 촛불혁명은 우리가 서양의 역사에서 보는 일반적 의미의 정치적 혁명이라기보다는 함석헌이 말했던 "씨올혁명"에[17] 더 가깝다.

3. 반동적 퇴행은 가능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에서 혁명적 진보가 반동적 퇴행으로 귀착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촛불혁명이 이룬 진보 역시 다시 퇴행할 가능성은 없는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물음을 보다 구체적인 정치 현실에 대입해서 재구성하자면, 그것은 한국의 자칭 보수 정당,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매판 정당(들)이 다시 권력을

---

15) 교토대학의 오구라기조(小倉紀藏)교수는 『朝鮮思想全史』(筑摩書房, 2017)에서 "사상의 혁명적인 정치적 역할"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조선 사상 전체의 성격으로 제시하면서, 그런 성격을 또한 "조선적 영성"이라 불렀다. (같은 책, 18, 24쪽 등을 보시오.)

16) 그 역사에 대해서는 천성호, 『한국야학운동사-자유를 향한 여정 110년』(학이시습, 2009) 참고. 더 나아가 교육이 한국의 사회진보에 기여한 바는 단순히 야학 같은 비정규 교육기관의 기여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촛불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경우 그들의 배운 교과서는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의 교과서가 아니다. 여전히 남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이 우리를 지적으로 진보적으로 각성시켜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17) 김상봉, 「함석헌과 씨올혁명의 꿈」, 『씨올의 소리』, 2010년 3/4월호 통권 209호. 함석헌에 따르면 "참 혁명이라고 하면 엄정한 의미에서 씨올의 혁명만이 참 혁명"이다.(함석헌, 「씨올혁명의 꿈」, 「함석헌전집」 제12권, 한길사, 1993, 107쪽.) 씨올혁명이란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동시에 안으로부터의 혁명이다. 그런 까닭에 "혁명은 어쩔 수 없이 종교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혁명이 종교요, 종교가 혁명이다. 나라를 고치면 혁명이요, 나를 고치면 종교다. 종교는 아낙이요, 혁명은 바깥이다."(함석헌, 「인간혁명」, 「함석헌전집」 제2권, 한길사, 1993, 80쪽.) 여기서 함석헌이 말하는 종교는 제도화된 기성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고치는' 내면의 깨달음과 믿음을 의미한다.

되찾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정치적 세력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우리는 박근혜의 중도 퇴진을 예측했던 것과 같은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18]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일반적인 의미의 반동적 퇴행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한국의 매판 정당들은 소멸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한국의 민중항쟁의 역사가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19] 식의 외부적 작용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이었더라면, 또는 생산력과 생산양식의 불일치에 의한 경제적 하부구조의 변동이 낳은 상부구조의 변화였더라면, 우리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외적인 변화에 따라 촛불혁명이 다시 혁명 이전의 상태로 퇴행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어 일어난 사건이라면 언제라도 그 외적 조건의 변화에 의해 다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중항쟁이 전위적인 정당이나 그 정당의 지도자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이 경우에도 그런 전위정당이나 지도자의 타락이나 과오에 의해 혁명의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촛불혁명을 어떤 배후 조직에 의해 조종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정이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졌듯이, 문재인 정부의 가능한 한계나 과오가 다시 매판정당의 부활을 불러오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20]

하지만 한국의 민중항쟁은 하부구조 상부구조의 모순이나, 전위적인 조직의 주도로 다 설명될 수 없다. 한국의 민중항쟁사에서 전위정당의 주도로 일어난 대표적인 항쟁이 제주4.3인데,[21] 거시적으로 보자면 이는 예외적인 경우였고 4.19나 부마항쟁 또는 5.18의 경우처럼 광범위한 민중적 주도에 의해 항쟁이 촉발되고 전개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이번의 촛불혁명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점이 한국의 민중항쟁이 유럽의 그것과 다른 점 가운데 하나이다. 유럽의 정치적 변혁은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부터 전통적으로 밑으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중들은 대개 수동적으로 그런 변화에 순응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럽의 정치는 지배계급이든 그에 저항하는 혁명 세력이든 양쪽 모두 대부분 전위적이고 과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사정은 일본의 근 현대 정치 제체도 마찬가지이다. 애당초 메이지 유신에서 시작된 입헌민주주의는 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었던 까닭에 다이쇼(大正) 민주주의 시대에 만개했던 민주주의는 지배 계급의 필요에 따라 아무런 저항 없이 다시 회수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일본은 군국주의로 퇴행했었다. 이것은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인데, 그것은 미국에 의해 외부로부터 주어진 제도인 까닭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언제라도 전체주의적 야만으로 퇴행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적 저항에 의해 항쟁이 일어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민중적이다. 다시 말해 한국의 정치적 진보는 민중들 자신의 주도에 의해 스스로 이룬 성과인 것이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자면 이처럼 한국의 민중항쟁이 혁명적 전위정당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었던 까닭에 때마다 항쟁은 기존의 권력을 타도한 뒤에 다시 기존의 정치세력에 의해 전유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까닭에 4.19 이후나 6월항쟁 이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퇴행은 필연적으로 예정된 일이었다. 또한 그런 퇴행으로 말미암아 항쟁도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18)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일찍부터 반복해서 예측했었으나 진지하게 귀를 기울인 사람은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겨레21』, 제1151호 참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2016년 6월 강의 동영상 참고.

19) 김봉현, 김민주,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84쪽.

20) 물론 이 기대는 헛된 것이지만, 그것이 또한 이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기도 하다. 바로 그 헛된 망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되어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전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일종의 자연법칙이다.

21) 제주4.3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에 따라 일어났다.

하지만 같은 사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렇게 때마다 보수적인 기존의 정치세력에 의해 항쟁의 성과가 찬탈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항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이 땅의 민중들은 그런 반복되는 항쟁을 통해 스스로 의식화되어 왔다. 스스로 겪어야 했던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항쟁이 이 땅의 민중들을 교육하고 정치적으로 각성시켜왔던 것이다. 남에게 선물로 받은 물건은 다시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나에게 내적으로 귀속하는 것은 누구도 나에게서 뺏을 수 없고, 외적인 변화에 따라 제거될 수도 없다. 이를테면 어린 아이가 걷는 법을 배운 것이나 그가 자라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경우처럼 나의 육체가 스스로 습득한 능력은 설령 내가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고 빼앗길 수도 없다. 이런 사정은 정신에 귀속하는 능력과 소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단지 인식과 학습을 통해 정신 가운데 축적된 기억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품이라고 부르는 정신의 속성은 정신의 다른 모든 속성 가운데서도 외적 작용에 의해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의 정체성을 이루는 고유한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성품이 안정되게 형성되는 것도 오랜 성숙의 시간을 요하는 것이지만, 그런 만큼 한 번 형성된 성품은 우연적 요인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개인적 주체의 성품만이 아니라 집단적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고유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치이다. 외부적 조건에 의해 성립된 제도는 그 외부적 조건이 변화되면 같이 변하거나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겨레의 내적 성숙에 의해 성립된 제도나 사회적 진보는 외적 조건이 변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보야 말로 남이 준 선물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 피 흘려 스스로 얻어낸 성취이다. 그런데 그 성취는 단순히 외적 투쟁의 전리품일 뿐만 아니라 내적 성숙의 자연스러운 외화인 까닭에 쉽게 퇴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현대 민중 항쟁을 통한 한국 사회의 진보는 쉽게 퇴행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이다.

4. 열등감의 극복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판정당의 존속과 재집권 등에 의해 퇴행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하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로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요인이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오랜 대외적 열등감이 이즈음에 와서 거의 극복되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민중의 열등감이 모든 매판적 기생권력의 정신적 근거이기 때문이다.[22]

돌이켜보면 이 땅의 민중들을 국가기구와의 적대적 대립으로 몰아넣은 것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나라가 너무나 오랫동안 온전한 주권국가라기보다는 일종의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이다.[23] 조선 시대에는 중국의 제후국으로, 그

22) 식민지 인민의 식민종주국에 대한 내면화된 열등감에 대한 현대적 연구는 아마도 프란츠 파농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거꾸로 유럽이 어떻게 타자를 열등한 존재로 지속적으로 낙인찍어왔는지를 문헌학적 근거를 통해 입증해보임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한국의 경우 서양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열등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아마도 아래에서 소개할 윤치호의 일기가 아닐까 한다. 개화기 이래 한국인의 내면화된 열등감에 대해서는 한국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으나, 최근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은 본격적인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 변화를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조금 더 시간적 거리가 필요할 것이다.

23) 식민지국가란 한편에서는 제국의 제후국이나 식민지로 전락한 국가라는 뜻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외부에서 식민지를 갖지 못한 까닭에 내부에서 식민지를 만들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내부 식민지화 또는 내부의 노예화야말로 내부로부터 민중항쟁을 불러오는 필연적 토대가 된다. 이처럼 식민지 국가의 민중이 겪어야 하는 내적 곤경으로부터 한국의 민중항쟁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나의 글, 「귀향: 혁명의 시원을 찾아

뒤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그리고 해방이 된 뒤에는 미국의 반식민지로 존재해 온 나라를 가리켜 온전한 주권국가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식민지 국가에서 국가기구는 인민의 일반의지를 대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민 종주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24] 식민 종주국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한에서 식민지 국가의 지배계급은 식민 종주국의 승인과 지지를 받게 된다. 이처럼 겨레의 지지가 아니라 외세의 비호와 후견에 의지해서 유지되는 국가 권력은 민중을 적대시하게 되고, 이로부터 국가기구와 민중 사이에는 잠재적 전쟁상태가 조성되는데, 거시적으로 보자면 이 땅의 민중항쟁은 그런 식민지 국가의 내적 모순의 분출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지금까지 민중항쟁의 역사를 두고 보자면 "내적 전쟁 상태와 외적 식민 상태는 한국 사회의 상시적 본질에 속한다."고[25] 말할 수 있다.

런데 이런 근본적 상황 속에서 한국의 자칭 보수정당은 외세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정치집단이다. 여러 정당이 경쟁하는 정치체제 내에서는 모든 정당은 누군가의 이익을 먼저 돌보고 대변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의 이른바 보수정당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가? 그들은 외세의 이익을 대변한다.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은 도리어 민주당이다.) 다른 모든 정체성은 이 정체성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들의 정체성과 결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치집단이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이 외세의 이익 옹호라는 것을 은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오직 외세에 의존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는, 자기 불신, 자기 부정, 자기 비하의 감정을 널리 퍼트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중이 정치를 불신하고 냉소하며 스스로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자기를 먼저 속이지 않고서는 남을 속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그런 자기비하의 감정은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에게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습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선명한 차이 속에서 확인하려면 가능한 한 현재로부터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윤치호(1865~1945)의 일기에서 우리는 자기비하의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 "흑인 노예제도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색인을 위해 취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인디언이 처했던 상황과 흑인들의 상황을 비교하라. 한 민족이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을 때,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더 개화되고 더 강한 인민에게 통치받고, 보호받으며 가르침을 받는 것이 더 좋다. 영국의 동인도 정책에 대해 실제 있었거나 없었거나 간에 어떤 비난을 퍼부어도 좋다. 나는 인도가 다른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보다 영국 정부 아래 있는 것이 분명 더 낫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 주장할

서-부끄러움에 대하여」, 『철학의 헌정-5.18을 생각함』, 229~235, 245쪽 등을 보시오. 덧붙이자면, '식민지 국가'란 사실 그 자체로서는 일종의 형용모순이다. 왜냐하면 식민지는 제국에 귀속하는 영토로서 그 자체로서는 고유의 주권이 없으므로 온전한 의미에서 국가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자면 서양에서는 로마 지배 아래의 그리스 도시국가들이나 유대나라 또는 20세기 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처럼 자치권이나 형식적 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식민지나 다름없는 예속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조선이 중국에 대해 그런 예속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식민지 국가란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자치권도 가지고 있으나 그 자치권이 어디까지나 제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제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전락한 국가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제국은 식민지 국가의 반대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서로주체성의 현실태가 아니라 홀로주체성의 현실태인 한에서 국가는 제국을 지향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국가는 소멸하거나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가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국가는 제국이 되거나 아니면 식민지가 되거나 둘 중 한 길을 걷는 수밖에 없다. 물론 제국도 식민지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변이 속에 식민지 국가가 생겨나고 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양의 정치철학이 국가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은 언제나 제국(imperium)으로서의 국가를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식민지 국가는 원래 서양의 정치철학에는 존재하지 않는 범주이다. 그런 까닭에 서양의 정치철학 교과서를 통해 한국의 정치현실을 설명하려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오래전부터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이다.

24) 이승만부터 박정희와 전두환을 거쳐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른바 보수정당이라는 부적절한 간판을 걸고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 잔당들 역시, 이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들의 식민 종주국인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는 한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 지원에 힘입어 이 땅에서 권력을 유지해 왔던 매국노 집단이다.

25) 김상봉, 『다음 국가를 말하다-공화국을 위한 열세가지 질문』, 143쪽.

것이다. 조선이 자치할 수 없다면 중국 아래 있는 것보다는 영국 아래 있는 것이 분명히 더 좋을 것이다.”.”[26]

윤치호의 생애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는 그가 특별히 더 사악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다. 도리어 우리는 그가 개인적으로는 교양과 미덕을 겸비하고 공적으로는 그 나름대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를 친일로 이끌어간 것은 특별한 악의나 탐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이 자치할 수 없다”는 자기비하의 감정이었다. 자치할 수 없다면 인디언들처럼 싸우다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흑인들처럼 노예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는 저 논리가 친일의 출발인 것이다.

조선의 엘리트 지식인들의 그런 유약함과 열등감이 해방 뒤에도 전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은 1980년대 유포되기 시작한 안병직이나 이영훈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보면 알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론의 외피를 쓰고 나타난 것은 80년대의 일이지만 그 논리 자체는 해묵은 식민주의 논리 또는 친일파의 논리이다. 그런데 그 이론 아닌 이론의 전제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도리어 주관적 감정으로서, 곧 한국인은 스스로 근대화를 할 수가 없(었)다는 자기비하의 감정 곧 열등감이다.

이 열등감이야말로 우리가 외세에 의존해서만 생존할 수 있다는 사대주의의 근거인바, 오직 민중이 그 열등감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한에서만 매판정당도 민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중국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는 열등감이 사대주의를 낳고,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근대화할 수 없다는 열등감이 친일파를 낳는다. 그리고 미국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열등감이 이승만과 박정희 이후 매판적 정치 집단을 존속시켜왔던 것이다.[27] 더 나아가 이런 열등감은 단순히 외적인 힘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정신적 열등감이었던 까닭에 쉽게 근절될 수 없었다. 공자와 맹자는 조선인들에겐 도덕적 스승이었으니, 그것이 조선의 지배계급의 사대주의의 뿌리였다. 마찬가지로 이광수의 친일은 그의 『민족개조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도덕적 열등감과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그런 열등감이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100년 전 또는 50년 전에 서양이나 일본에 대해 지니고 있었던 것과 같은 열등감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사회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촛불혁명이 평균적인 한국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도록 했으리라는 데 대해서는 굳이 증명이 필요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많게는 한꺼번에 100만이 넘는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런 폭력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적인데, 게다가 그렇게 놀라운 집단적 저항의 몸짓이 과거처럼 다시 국가 폭력에 의해 무위로 돌아가지 않고 순리에 따라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누구도 1964년 발표한 『회색인』에서 최인훈이 탄식했듯이 “그래서 고무신 한 켤레에도 팔리고 막걸리 한 사발에도 바뀌는 거야.”라고 한국인의 후진적 정치의식에 좌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리어 우리 자신이 불의한 현실을 바꾸었다는 긍지와 함께 우리가 원한다면 불의한 현실을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야말로 촛불혁명이 보통의 한국인에게 선사한 새로운 자기인식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기긍지를 가진 평균적 한국인이라면, 더는 누구도 미국이나

---

26) 윤치호, 박정신 옮김, 『국역 윤치호 일기 2』, 연세대 출판부, 2003, 15쪽. 1899년 12월 24일 일기.

27) 생각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의 요람이 서울대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감히 누구도 그런 패륜적 가설을 이론과 학문의 이름으로 유포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열등감이야말로 조선 시대 이래, 아니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 이래 이 나라 지배 엘리트들의 유서 깊은 습속이다. 그리고 수재들의 그런 열등감과 그 결과로 나타난 “타자 속에서의 자기상실”에(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을 보시오.) 저항해 자기 자신의 존엄과 주체성을 정립하려 했던 것이 이 땅의 민중 항쟁을 추동해 온 근원적 열정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지배계급의 열등감이 그들로 하여금 민중의 지지가 아니라 외세의 비호에 의해 나라를 운영하게 만들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외세의 이익을 위해 서슴없이 민중을 희생시키도록 함으로써 민중의 삶이 도탄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치적 상황보다 한국의 그것이 더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좋든 싫든 미국과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은 점점 더 찾아보기 어려워 질 것이다.

물론 자연에 비약이 없듯이 역사에도 단절적인 변화는 없으므로, 과거의 관성이 한 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외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수십 년을 이어 내려온 권력과 이익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전체 유권자 다섯 가운데 하나가 외세의 이익에 복무하는 매판정당(들)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하더라도[28]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29] 하지만 한국 사회가 충분히 물질적으로 발전했고 정신적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도 더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아직도 그런 자들에 기대어 국가 권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정당(들)이 다음번 총선에서 소멸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다.

5. 저항에서 형성으로의 이행

민중과 국가기구가 잠재적 전쟁상태에 있을 때, 항쟁의 일차적 목표는 언제나 기존의 국가기구의 부정과 타도일 수밖에 없다. 물론 민중은 불의한 권력을 거부하고 부정하면서도 참된 나라를 지향한다. 그러나 민중의 항쟁이 현존하는 국가기구를 실제로 타도하거나 제거할 수 없을 때, 항쟁은 새로운 현실을 온전히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 실패나 패배에도 불구하고 결코 식지 않는 민중의 참된 나라에 대한 지향과 동경은 현실에서는 언제나 '잠정적인 것'이거나 '임시적인 것' 또는 아예 계시로서만 남게 된다. 동학농민전쟁 당시의 집강소나, 3.1운동이 낳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그랬듯이, 또는 80년 5월 그 열흘 동안의 광주를 두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계시"라고 불렀듯이.[30]

그런데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 사회가 민중과 국가기구 사이의 전쟁상태로부터 정치적 상태로 진입했다는 것은 기존의 국가기구나 사회질서의 부정이나 타도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의 형성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국인들이 자기 자신을 자유로운 주체로서 형성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삶의 세계를 형성함으로써만 현실적으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데, 그가 직접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삶의 세계의 한계가 바로 나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를 주체로서 형성한다는 것과 자기가 속한 나라를 스스로 형성한다는 것은 공속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근대의 철학자들이 자유의 실현이 국가의 존재이유라고 말했던 까닭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는 오직 그가 형성하는 국가 속에서만 또는 국가를 형성하는 능동적인 활동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는 그

---

28) 박성민, 「2020년 한국당은 소멸할 것이다··· 생각을, 사람을 안 바꾸면」, 『경향신문』, 2018년 10월 6일, 7면. "한국의 유권자 지형을 거칠게 분류하면 30:20:30:20이다. 맨 앞의 30%는 2007년 정동영과 권영길의 지지율 합이다. 어떤 경우에도 보수 정당을 찍지 않는다. 마지만 20%는 이른바 '태극기'다. 어떤 경우에도 진보정당을 찍지 않는다." 이 진단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어떤 경우에도 진보정당을 찍지 않는 이른바 '태극기'가 전체 유권자들 가운데 20% 정도는 된다는 것은 지난 일 년여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생각할 때 수긍할 수 있는 진단이라 생각된다.

29) 구약성서에 따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자유의 땅을 향해 떠났을 때, 그 목적지는 지리적 거리 그 자체로는 기껏 보름이나 한 달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만 했다. 그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남아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모세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으니, 그 역시 이집트에서 이민족의 노예로 태어났었기 때문이다. 이 심오한 우화는 한 민족이 노예의 굴레를 최종적으로 벗어던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우쳐준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오직 생물학적인 세대교체만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저 20%의 노예적 하비투스를 최종적으로 뿌리 뽑아 줄 것이다.

30)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오. 김상봉, 「계시로서의 역사-5.18민중항쟁에 대한 종교적 해석의 시도」, 『철학의 헌정』, 135-159쪽.

형성의 활동 속에 존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이런 자기형성의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왔다. 처음부터 나라형성의 자유를 허락받지 못하고 오로지 수동적인 보살핌이나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한 겨레를 가리켜 백성이라 부른다면, 우리는 그 백성이 수탈에 저항할 때, 같은 겨레가 민중으로 탈바꿈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저항하는 겨레는 민중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항쟁의 역사를 써 온 겨레는 민중이었다. 그런데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 사회가 민중과 국가기구의 전쟁상태에서 정치적 상태로 이행했다는 것은 우리들 한국인들이 억압받고 저항하는 민중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형성하는 시민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백성이 통치와 보살핌의 대상이라면, 민중은 자신을 노예화하려는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주체이다. 그런데 저항은 자유를 위한 출발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자유의 실현은 아니다. 자유는 스스로 형성하는 것에 존립하기 때문이다. 그런 형성의 주체, 그리하여 정치적 자유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주체가 바로 시민이다.

그런데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은 생각의 주체와는 구별된다. 둘 다 세계를 형성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으나, 생각과 인식의 주체가 형성하는 세계가 이념의 세계인데 반해, 시민적 주체가 형성하는 세계는 구체적 삶의 세계로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같은 형성이라도 인식의 주체가 세계를 이념 속에서 설계한다면 정치적 주체인 시민은 그 이념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게 되는데, 그 현실적 형성의 과제가 바로 나라이다. 그리하여 자기의 삶의 세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시민에게 나라는 소외된 권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자유로운 형성의 과제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바로 "네가 나라다."[31]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이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의 자기형성은 나라를 형성하는 것에 존립한다.

6. 권리에서 만남으로

하지만 나라를 형성하는 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뜻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자유가 홀로주체의 제한 없는 자기주장이라면 시민적 자유의 실현이란 무정부상태로의 귀착이거나, 끝없는 계급투쟁의 연속일 것이다. 그 와중에서 국가는 안으로부터 해체되거나 아니면, 우리 모두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나라로 퇴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형성을 통한 나와 너의 자유로운 자기실현은 너와 나의 만남의 온전함 속에서만 실현된다.

>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형성할 때, 나는 자유이다. 하지만 나는 오직 너와 만나 우리가 될 때에만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진리는 만남이요, 자유는 본질에서 사회적이다. 나의 자유는 그 만남의 공동체가 확장되는 만큼 넓어지고, 그 만남의 온전함만큼만 온전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삶을 위해, 너와 내가 평등하게 만나 서로 주체로서 우리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이 바로 정치이다.."[32]

그리고 그 정치적 형성의 과제가 되는 공동체가 국가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그리고 '너는 너'라는 홀로주체의

31) 31 김상봉, 『네가 나라다-세월호 세대를 위한 정치철

32) 지금은 사라진 옛 〈진보신당〉 강령 전문(前文) 1.

자기주장이 아니라 함석헌의 말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너도 나라!'라고, 곧 '네가 바로 나'라고 고백하는 서로주체성 속에서만 나라의 기초는 굳건해진다.

이런 온전한 만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야말로 한국의 민중항쟁의 역사가 잉태한 새로운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양의 진보를 이끌어 온 자유의 이념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권리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고, 그런 개인들이 더불어 형성하는 공동체의 온전함 역시 각자의 권리의 균형에 존립한다. 그러나 각자의 권리의 확보와 서로간의 권리의 균형은 온전한 나라를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권리의 균형이란 시민 사회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표시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는 너와 나의 인격적 만남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너와 나의 참된 만남을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너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차간에 손해 보지 않는 기계적 균형을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전태일은 배고픈 여공들을 위해 주머니 속의 마지막 남은 버스비를 꺼내 풀빵을 사준 뒤 자기는 밤길을 걸어 청계천에서 도봉산 아래 집까지 걸어갔다. 하지만 풀빵이 그들의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으므로 그는 자기의 눈을 팔아 그들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공장을 지으려 했다. 그것조차 불가능해졌을 때,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혔다.[33] 그 불꽃이 80년 광주의 횃불이 되고, 2016년에는 온 나라를 밝힌 수백만 촛불이 되었다. 그렇게 가난한 여공의 슬픔과 눈물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해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의 눈물에 대한 응답까지, 타인의 슬픔에 자기의 존재를 걸고 응답하는 전통은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무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무늬 사이로 다시 우리 모두의 나라로 이르는 길이 열릴 것이다.

7. 왜 남과 북 사이의 길이 가장 처음 열렸는가?

그런데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나라 형성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열릴 수 있는 만남의 길들 가운데서도 다른 모든 단절의 심연에 앞서 (이를테면 노동과 자본,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또는 학벌의 차별에 앞서) 하필이면 남한과 북한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는 만남의 길이 가장 먼저 열렸는가? 그 까닭은 남과 북 사이의 만남의 길이야말로 나라의 주권을 확고히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자유로운 형성의 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형성하는 국가가 주체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거꾸로 말해 내가 귀속하는 국가가 주체적이지 못하고 어떤 외세에 예속된 상태에 있다면 나의 모든 형성행위는 처음부터 그 외세의 힘에 의해 저지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으로서 나와 너의 시민적 주체성과 국가의 주체성 다시 말해 국가의 주권은 적어도 그 본질에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뗄 수 없이 공속한다.[34]

그런데 해방 이후 한국의 역사에서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시민적인 주체성에 관해서는 엄청난 진보를 이루었지만, 국가의 주권을 확고히 정립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최근의 이른바 천안함 침몰 이후 내려진 5.24조치와 관련해서 일어난 해프닝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35]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5.24조치의 해제를 언급한 것을

33) 조영래, 『전태일 평전』, 전태일기념사업회, 2009.

34) 여기서 주권(souverainet□)과 주체(subject)가 모두 근대에 새롭게 쓰이기 시작한 개념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칸트(I. Kant)에 와서야 확립된 주체의 개념에 비해 장 보댕(J. Bodin)에 의해 주권의 개념이 훨씬 먼저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개인의 주체성이 언제나 주권을 전제한다는 사태 그 자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35) 그 사건 직후 정부가 북한과의 관련성을 스스로 부인했었다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곳도 아니고 한미 연합 훈련 중에 북한의 잠수함이 신출귀몰하게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도주했다고 믿는 것은 김일성의 축지법을 믿는 것보다 더 허황된 일이다. 그런

두고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 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으리라고 말한 것은 아직도 이 나라가 온전한 주권국가가 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촛불혁명의 성공 이후 한국 사회가 다른 무엇보다 국가 주권의 확립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종의 역사적 필연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가 주체적이지 않다면 시민의 주체성 역시 결코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36] 그런 까닭에 자신을 주체로서 자각한 시민이라면 반드시 국가의 주체성 곧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모든 것에 앞서는 일차적 선결문제로서 요구하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랜 동안의 민중항쟁을 통해 단련된 민중의 시민적 주체성에 대한 열망이 촛불혁명을 통해 실현되면서, 개인 개인의 정치적 주체성이 시민 공동체인 국가의 집단적 주체성 곧 온전한 주권의 정립과 실현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난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행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 남북 분단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새로운 나라 형성의 첫째 과제가 남북 분단의 극복이 되었는가? 그 까닭은 남북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에 예속된 하위주체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남북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갈 때만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다시 이 나라를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고 자신들은 그 식민통치의 대리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위탁받아 나라 안에서 왕 노릇하는 매판적 정치세력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8.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의미에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남북문제와 국가 주권의 문제에 대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거부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자연스런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통일의 기초를 확고히 놓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를 이끌고 있는 주체들의 면면을 고려할 때, 그들이 떠맡아야 하고 또 감당할 수도 있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문재인 정부를 이끌고 있는 중심 세력이 권력재창출에 눈이 어두워져 자신들에게 맡겨진 정당한 역사적 소임을 넘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떠맡겠다는 만용에 사로잡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그리스 비극이 반복해서 경고했던 어리석은 인간의 휘브리스hybris이다.) 그들은 운명의 여신의 방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아니 틀림없이 이미 그들은 마시지 말아야 할 독배를 마셔버리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치명적인 하마르티아(hamartia)로 말미암아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종말의 시간을 향해 돌아가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촛불혁명이 이룬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을 촉발시킨 87년체제의 모순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라다』에서 설명했듯이) 이른바 87년체제의 내적 모순이란 6월항쟁 이후 정치는 민주화 되었으나 경제는 전혀 민주화 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37] 민중이 피 흘려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뒤에 이 땅의 자본가들은

데 정권교체 후에도 이 문제가 바로잡히지도 않고 공론화되지도 못하고 있는 까닭은 사건의 중심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36) 김상봉, 『네가 나라다』, 머리말을 보시오. 거기서 나는 주권의 확립이 국가의 구체적인 정의의 실현에 선행해야 할 선결문제임을 강조했었다.

37) 김상봉, 『네가 나라다』, 50쪽 아래.

박정희도 전두환도 없는 세상에서 예전 같으면 독재자들에게 강탈당했을 막대한 재산 가운데 작은 일부만으로도 여의도 정치인들과 서초동 법조인들, 그리고 광화문의 관료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그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민주화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재벌이 민주화의 과실을 찬탈하여 나라 전체를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기업국가로 만들고 국민을 재벌 가문의 노예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였던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38)]

그런데 그 모순이 노무현도 이명박도 아니고 하필이면 박근혜에 이르러 폭발했던 까닭은 그가 어리석게도 대한민국이 이미 기업국가가 되어버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라를 다시 군주국가로 되돌리려 했기 때문이다.[39)] 너무 오랜 칩거 생활 때문에 그녀는 "권력이 청와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작 5년 단임의 대통령이 3대째 세습하면서 한국 사회를 이미 물샐틈없이 장악하고 있는 재벌권력을 다시 노예로 길들이려 했으니, 그 때문에 박근혜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지배자들로부터 처참하게 응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이다. 그리고 그 계승자답게 현 정부가 삼성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금산분리의 완화나 원격의료 도입추진 등을 통해 오해의 여지가 없이 우리 모두에게 증명해 보여주었다. 삼성과 현 정부의 친밀함을 애써 감추지 못하고 인도에서 또는 평양에서 증명해 보여야 했다는 것이야말로, 현 정부가 삼성에 얼마나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지를 말해주는 희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선량한 시민들은 그 희극을 보면서도 애써 모른 체 해 줄 것이다. 우리 앞에 보다 엄중한 과제가 놓여 있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다음 총선에서 저 매국노들의 정당을 국회의사당에서 깨끗이 추방하기 전까지는 현 정부의 과오를 애써 모른 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선의를 지금의 집권세력은 악용할 것이다. 그렇게 파멸을 부르는 비극의 씨앗은 언제나 자기 속에서 자라는 법이니, 인간의 어리석음을 타인이 치유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9.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기업국가의 미래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재벌이 지배하는 기업국가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특권계급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게 마련이다. 그 답은 북에서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남북 교류에 따른 북한 특수가 남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는 망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호남선 고속철도 공사가 광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군산의 자동차 공장이 몰락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4대강 사업이 부산과 대구의 토호들을 배불리는 것 외에 아무 기여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남쪽의 기업이 북한 땅에 철도와 도로를 놓는 토목공사를 벌인다면 재벌 금고에 돈이 쌓이기는 하겠지만 그 때문에 남쪽 젊은이들의 가난이 해결될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돈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들 사이에서만 오고간다. 기업은 최저생계비만 지불하고도 비정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들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 그리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라는 시대에 재벌 기업의 금고에만 천문학적인 사내 유보금이 쌓여 갈 뿐, 정작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에 시달리는 초현실주의적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

38) 김용철,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2010), 김상봉, 김용철 외, 『굿바이 삼성』(꾸리에, 2010)

39) 김상봉, 『네가 나라다』, 67쪽 아래.

북한의 개방과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가져다 줄 효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남한의 재벌독점경제체제와는 다른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게 되리라는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경제개방이 북한체제에 위협이 되리라는 것은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사안이다. 그 위험은 휴전선 남쪽에 북한과는 전혀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증폭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교류가 본격화되면 될수록, 북한 주민들의 동요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는 과거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돌이켜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과 같이 남북한 교류와 경제개방을 추진하면서도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체제가 남한체제보다 우월하다는 확신, 아니 최소한 남한체제보다 북한 체제가 열등하지 않다는 확신을 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그 확신을 심어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경제의 사회주의적 공공성밖에 없다. 중국이 말하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socialist market economy)나 베트남이 모색하는 사회주의적 지향의 시장경제(socialist oriented market economy)처럼 북한 역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공공성을 결합시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일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의 사회주의적 공공성이 지금으로서는 개선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남한의 재벌독점경제체제와 비교해서 북한이 확고하게 비교우위를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당신이라면 (루소가 영국의 노동자들을 두고 야유했듯이) 몇 년에 한 번씩 선거 때만 자유로운 시민일 뿐 1년 365일을 재벌기업이나 그 하청회사에서 임금노예로 사는 이 '헬조선'에서의 삶과 아침저녁으로 어버이 수령님의 사진이나 동상에 절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사람대접 받으며 사는 삶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라면 어디를 선택하겠는가?

이 물음을 생각하면 남한에 북한이 있고 북한에 남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 서로를 폭력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던 역사를 끝내고 두 체제가 평화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시작하게 되면, 결국 서로가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면서 더불어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남한은 북한을 따라 경제의 공공성과 국가의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북한 역시 남한을 따라 정치의 공공성과 시민적 주체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은 서로의 고통에 손을 내밀어 응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고통에 응답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40] 서서히 서로에게 "너도 나라"는 고백을 할 날이 올 것이다. 통일은 그렇게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서로주체성의 실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41]

10. 새로운 나라의 형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지만 그 날이 그냥 기다린다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 역시 능동적 형성의 과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온전히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라의 설계도이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하듯이 나라를 세우려 할 경우에도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해방 후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나라를 바로

40) 응답과 배움은 서로주체성의 본질적 계기들이다.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 296~300쪽.

41) 서로주체성의 이념에 입각한 남북통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상봉 외, 『다음국가를 말하다』, 12장 359~377쪽, 그리고 김상봉과 고명섭, 『만남의 철학-김상봉과 고명섭의 철학대담』, 585~637쪽을 참고하시오.

세우려면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자각이 전혀 뿌리내리지 못했다. 그런 까닭에 낡고 부패한 권력을 타도하고 스스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해도 설계도가 없는 까닭에 다시 예전 방식을 답습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자기 나라를 스스로 형성하기 위한 설계도를 만들려 하지 않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매판 지배 집단의 경우에는 식민 종주국의 지시에 따르거나 그들의 설계도를 빌려 오면 그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그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들을 비판하는 이른바 진보세력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론과 학문에서 철저히 사대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까닭에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양의 진보이론에만 기대려 한다. 우파가 권력의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좌파는 이론의 사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42)]

물론 단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남의 이론이나 사례에 기댈 수 있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새롭게 형성하려 할 경우에는 그런 모방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라는 하나의 유기적 전체인 까닭에,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부분적 설계도를 모자이크처럼 연결한다고 해서 전체의 설계도가 나오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라 전체의 설계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서 시작하는 이론의 총체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현실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고찰하면서 총체성 속에서 그 현실을 그려내는 정신의 노동이 철학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헤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한 사람들은 "형이상학 없이 개화된 민족"이다. 그에 반해 북한은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자기들의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북한의 철학적 경직성이 그 사회의 취약점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남한의 철학적 무국적성과 몰주체성이 북한의 철학적 주체성을 비판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의 주체사상이 싫다면 우리가 다른 주체의 이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바탕 위에서 서로 대화하고 접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현실적 권력이었다. 그렇게 타도해야 할 외부의 적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학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사정은 촛불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젠더와 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그 모든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모색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 이룰 수 있으려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깊은 성찰 위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총체성 속에서 기투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정신적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누가 그런 정신의 노동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촛불 이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다.

---

42) 서양의 이론이나 역사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서 다음과 같은 글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김누리, 「68혁명 50주년과 한국의 특수한 길」, 『한겨레신문』, 2018년 10월 15일자. 이 글에서 필자는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습관화된 파시즘의 일상"을 살아가는 까닭이 유럽에서는 이미 50년 전에 일어났던 68혁명이 한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50년 지각한 68혁명'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미투운동'이 보여주는 지극히 취약한 페미니즘과 여성인권, '가면 쓴 민주주의'의 현실, 백인 선망과 유색인 차별에서 보이는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태도, 장애인·동성애자·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의 부족, 성해방 의식과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반권위주의 교육의 부재 등 일일이 다 손꼽기도 어렵다. 68혁명의 부재 때문에 한국은 현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부조리한 사회가 되었다. 소외, 자율, 탈물질주의, 반권위주의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사회,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평화주의에 대한 녹색 감수성이 빈약한 사회,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사회, 군사문화가 생활세계의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병영사회가 된 것이다. '68'은 세계 어디에서나 해방의 시작을 알렸지만, 한국에서만은 억압의 시작을 의미했다. 이제라도 이 뒤집힌 역사를 바로잡아 68혁명이 꿈꾸던 사회,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헬조선을 넘어서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68혁명의 부재 때문"이라면, 그래서 "이제라도" 그 훌륭한 나라들의 역사를 배우고 모방해야 한다면, 혹시 우리도 프랑스처럼 먼저 제국주의 침략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기 위해 150여년 전 수운 최제우의 글을 인용한다. "至於庚申 傳聞西洋之人 以爲天主之意 不取富貴 攻取天下 立其堂 行其道 故 吾亦有其然豈其然之疑(경신년에 와서 전해 듣건대 서양 사람들은 천주의 뜻이라 하여 부귀는 취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하를 쳐서 빼앗아 그 교당을 세우고 그 도를 행한다고 하므로 내 또한 그것이 그럴까 어찌 그것이 그럴까 하는 의심이 있었더니)" (최제우 「동경대전」, 천도교중앙총부 편, 「天道敎經典」, 17~8쪽.) 수운(水雲)이 서양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천주의 뜻을 의심했듯이 나 역시 그들의 68이 지금도 안녕하신지 궁금하다.

주제발표

촛불 혁명 2주년 학술 토론회

촛불 이후,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관후 정치학, 서강대

노동과 성평등, 그리고 돌봄 민주주의

윤자영 경제학, 충남대

주제발표 1

촛불 이후,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관후 정치학, 서강대

1.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와 오늘의 과제

1)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

민주화 이후 30년 간 한국 사회, 특히 국가는 어떤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가? 여기서는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각 정권의 특성을 중심으로 크게 민주화 이후 6개의 정권을 각 3개의 시기 – ①노태우/김영삼 시기, ②김대중/노무현 ③이명박/박근혜 – 로 나누고, 각 정부가 천명한 시대적 목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먼저 ①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행', 곧 '독재에서 민주화로의 소프트랜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이 정부들이 선택한 수단은 '자유주의적 개혁'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수단을 적절히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통치철학과 능력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국가부도'였고, 이는 오늘날 헬조선의 기원에 해당한다.

②의 시기에 주어진, 그리고 천명한 목표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이었다. 국가 부도의 위기를 원만히 해결함과 동시에, 87년 민주화 이후 10년 동안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군사독재의 문민화에 그쳤던 한계를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은 '정치적 주류세력의 교체', 그리고 변화를 이끌고 관리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었다. 이 시기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은 다른 어느 때와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할 수 없었으나, 문제는 정치세력의 교체 과정에서 정치지도자가 아닌 정당이라는 제도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관치경제의 극복과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국가는 갈팡질팡했다. 그 결과 민주화를 이끌었던 정치세력은 대선과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면서 '주류 정치세력 교체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국가는 시카고 경제학파 중심의 관료제에 의존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복귀'했으며, 한국사회는 헬조선의 전개 국면

을 맞는다.

③이 시기에 나타난 국가 목표의 특징은 신자유주의와 70년대 국가주의의 결합이다. 민주화 이후 20년이 지나고, 10년 간의 정권교체 시기 또한 경험한 대중은 민주화 이전의 '질서있는 성장'을 갈구했다. 여기서의 질서란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문화, 제도, 노동 및 진보적 세력에 대한 강력한 국가통제를 의미한다. 대중은 먼저 '성장의 신화'로 압축되는 이명박의 리더십을 요청했고, 이어서 박근혜를 통해 70년대식 국가주의와 '박정희 신화'를 불러내어 재현하고자 했다. 이들이 선택한 수단은 '자의적 국가경영'이었는데, 특정한 수단을 의도적으로 채택하고 실천했다기보다는 그 자체로 '공적 권력을 사유화'하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한국은 국가 부재의 상황에 도달했고, 사회적으로는 헬조선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특성〉

시기	목표	수단	문제	결과
노태우/김영삼 정권	독재에서 민주화로의 원만한 이행	자유주의적 개혁	통치철학과 능력의 부재	국가 부도 (헬조선의 기원)
김대중/노무현 정권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발전	주류 정치세력의 교체 및 정치적 리더십	정당의 미발전과 시장의 역습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의 복귀 (헬조선의 전개)
이명박/박근혜 정권	70년대식 성장주의와 전체주의	자의적 국가 경영	공적책임의 부재와 공적권력의 사유화	국가의 부재 (헬조선의 완성)

2) 현재적 과제 : 3중적 과제의 이중적·동시적·모순적 요구

이처럼 민주화 이후 30년을 지난 이후 한국 사회의 현재적 과제는 무엇인가? 크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치분야에서는 87년 민주화에서 나타난 최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87년 민주화가 더 이상 정치에 대한 군부의 개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정기적인 선거에 따라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 1.0이었다면, 현재의 정치적 과제는 기본권,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체제 등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 2.0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개혁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에서 동시적으로 요구된다. 먼저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권 민주주의에서는 의회, 사법부, 행정부, 정당 부문의 개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비제도권 민주주의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주민참여, 다양한 시민의회 및 공론화의 실험,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 등이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제도권과 비제도권 민주주의의 발전이 경쟁적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개혁의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의 미발전이 다른 부분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가령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의 제도화를 기존의 지방의회가 저지한다든지, 반대로 의회나 정당의 발전이 포퓰리즘에 의해 방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체의 모순이다. 현재 요구되는 정치적 과제가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서 새롭게 요구되는 것인데, 그 정치적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정치적 주체들

은 87년 민주화 세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1.0의 주체들에게 민주주의 2.0의 과제가 주어진 격이기 때문에 의지와 주체의 측면에서 부조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의 민주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현재적 과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70년대식 국가(관료)와 기업(재벌) 연합 체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다. 민주화 이후 한국은 관치경제의 한계를 벗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화와 자유주의적 개혁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았고, 이후 IMF 스스로도 실패한 계획이었다고 평가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실천하면서 권력이 시장으로 이전되었다. 결과적으로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강화되었고, 시장은 더욱 불공정해졌으며, 왜곡된 시장에 포섭된 국가는 불공정한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수단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의 과제는 한편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을 추진할 주체를 국가 및 시장에서 모두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가부문에서 관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며, 정당 및 정치인들 역시 시장에 장악되거나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개혁의 주체로 적절치 않다. 시장에서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처럼, 재벌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생태계를 뚫고 나와 새로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기업 모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와 시장 영역에서 모두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재벌 의존적 경제를 대체할만한 대안적 경제체제로서 '공유경제' 등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상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과제는 한마디로 헬조선 넘어서기라고 할 수 있다. 헬조선의 핵심은 금수저론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화 및 심화, 그리고 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사회적으로 공정성과 호혜성의 확보에 있다. 공정성이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노동 정의의 실현이고, 호혜성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파편화된 개인주의를 넘어 붕괴된 공동체성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즉, 공정한 이익사회와 호혜적 공동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제가 다양하고 모순적으로 보이는 정책수단을 동시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의 결합,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최저임금의 인상, 시장의 자율적 발전과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균형있게 동시적으로 추진될 때만이 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셈이다.

〈촛불 이후 한국사회의 현재적 과제〉

시기	목표	수단	문제
정치적 과제	민주주의 2.0의 구현	제도권 민주주의와 비제도권 민주주의의 동시적 발전	정치적 주체들의 의지와 능력
경제적 과제	국가(관료) + 기업(재벌) 연합체제의 극복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과 적극적인 산업정책	개혁 주체 및 대안 체제의 미발전
사회적 과제	사회적 불평등과 지속가능성의 해결	공정한 이익사회와 호혜적 공동사회의 재구축	동시적 추진이 어려운 모순적 목표

이러한 촛불 이후의 분야별 과제를 다시 재정의 해보면, 현재 한국사회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가 빚어낸 3중의 구조적 질곡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부문의 과제를 시대적 유산으로 파악해보면, 70년대의 근대화(경제적) 과제와 80

년대의 정치적 과제, 그리고 97년 이후 사회적 과제가 결합된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고자 할 때 드러나는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과제의 개별적 내용이 아니라 그것들 간의 관계와 성격이다. 즉, 3중의 질곡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의 시대적 과제가 완료되지 않고 중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시대적 유산들이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서 때로는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동시적으로 서로를 옥죄는 상황인 셈이다. 바로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핵심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시대적 과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과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서로 시간적, 공간적으로 연결되어서 일종의 '앙시앙레짐(구체제)'이 형성된 상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2. 촛불은 무엇이었는가?

1) 촛불의 이중성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특징과 현 시기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 및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들, 그리고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3중의 질곡에 대해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 어느 한 분야의 부분적 개혁으로 해결되지 않을 하나의 '체제'로서 앙시앙레짐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제를 해체할 수 있는 '혁명'은 어디서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이에 대해 당장의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종류의 혁명은 도둑처럼 찾아오고 그것의 직접적 원인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타날 그것의 성격을 과거를 되짚어 봄으로써 예측해 볼 수 있다.

근대의 과정에서 앙시앙레짐이 혁명으로 붕괴된 현상은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충돌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전환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방해하는 질곡이자 동시에 그것의 모태가 되는 이중적이며 혼돈의 공간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특성을 시간적으로는 비동시성의 동시성으로, 성격적으로는 근대성과 전근대성의 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촛불에서 이러한 특성들이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다.

우선 촛불의 원인에서는 전근대적인 국가와 근대적 국가의 속성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부 이후 헬조선이라는 구조적 사회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던 국가의 부재는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는데, 이러한 근대적 국가의 부재가 드러난 계기는 최순실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전근대적 정치행태였다.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것은 '이게 나라냐?'는 구호로 압축되는데, 여기서의 '국가'는 정치적 평등을 구현하고 사회경제적 모순을 해결해야 할 근대적 국가 뿐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애민 혹은 위민주의적 전근대적 국가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었다.

촛불에서 나타난 근대성과 전근대성의 이중성은 촛불을 작동시킨 민주주의의 함의에서도 확인된다. 촛불의 민주주의는 전형적인 마지노선 민주주의였다.[1] 먼저 아래로는 최소한의 근대적 민주주의, 곧 선출된 대표가 대표-책임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치하는 민주주의를 마지노선으로 삼고, 정치적 대표가 그것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될 때 시민들

1) 이 용어는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윤철 교수가 제안한 것이다.

이 거리에 나와 위임된 권력을 회수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촛불은 동시에 근대적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최대한의 상태, 곧 보통선거권과 정기적 선거에 의해 제도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또 하나의 마지노선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시민들은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구사항도 관철시키지 않은 채로, 혹은 아예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로 한순간에 광장에서 후퇴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촛불 민주주의의 근대적 이중성을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우선 작동하는 민주주의로서의 근대적 민주주의이며 19세기에 구현된 선거 민주주의의 형식적 절차였다. 그러나 동시에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로서 20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절반의 민주주의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촛불은 전근대적 국가(앙시앙레짐)에서 근대적 국가로서의 완전한 전환점이었으며, 19세기적 민주주의의 완성이자 20세기적 민주주의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물론 이러한 제한적 의미에서의 촛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촛불에 대한 평가절하라기보다는 촛불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포착함으로써, 그것이 남긴 과제를 선명하게 하고 새로운 목표를 올바로 설정하기 위함이다.

2) 근대의 완성과 탈근대적 과제들

촛불이 70년대 성장주의의 신화와 전체주의의 향수라는 전근대적 앙시앙레짐을 철폐시키고 근대적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왔다면, 촛불이 남긴 과제는 근대적 민주주의의 한계, 곧 탈근대적 과제들이다. 이러한 한계와 과제는 촛불 그 자체에서도 드러났으며, 촛불 이후에 특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촛불의 핵심적 구호였던 '국민 주권'이 전형적으로 그러한 경우에 속한다. 국민 주권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이 지향한 근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핵심적 목표이자 수단으로서 제창되었으나, 실제로는 성별과 재산권, 피부색 등의 이유로 오랫동안 차별적으로 적용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차별받은 자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확립된 권리다.

우리의 경우에도 해방과 정부수립으로 인해 1940년대에 선언적으로는 구현되었으나, 실제로는 87년 민주화 이후에야 헌법에 다시 명시됨으로써 법적으로 재확립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근대국가 역시 1948년에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1987년까지 약 40년에 걸쳐서 국가 수립(state building) 과정 속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국민주권이 확립된 근대 국민국가의 수립은 법률적으로 국민주권이 재확립된 87년을 넘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작동한 2017년에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촛불로 박근혜 정부를 종료시킨 2017년이야말로 한국에서 정치적 근대화가 완성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화의 완성은 곧 또 다른 탈근대적 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근대 국민국가 수립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선별과 '주권'의 결합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통합의 이데올로기이자 동시에 권리를 갖지 못한 자들, 곧 외국인과 여성, 노예를 배제하는 원리였듯이, 국민주권은 필연적으로 국민이 아닌 자들을 배제하는 근대적 민주주의의 원리다.

미국 혁명에서 재산을 갖지 못했던 빈민, 외국인, 흑인들은 독립전쟁에 참여하고도 국민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프랑스 혁명에서 도시 노동자인 상퀼로트들이 혁명을 주도한 민중이었음에도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 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촛불에 참여한 여성, 비정규직, 저소득층, 집 없는 자들, 청년, 노인, 외국인 노동자는 여전히 형식적인[2] 투표권 이외에 별로 가진 것이 없다. 87년 이후 기존 사회의 엘리트에 더하여 정규직 남성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주권을 획득했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선언적인 '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의 성별이 다른 성별에 비해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끼우는 노동자가 고용의 형태에 따라, 혹은 피부색이나 국적에 따라 두 배의 차이가 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곳에서 주권은 작동하고 있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소외된 이들이 원하는 주권, 곧 주인의 권리가 본래적으로 근대적 국민국가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근대 국민국가는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관대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특히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강화했다. 문화적 가부장제에 더하여 사회 재생산을 위한 노동 분업과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가져왔고, 이것은 실상 대부분의 국민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였다. 가난한 자들, 특히 토지와 집을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국가의 포섭은 최소한의 것이었고, 그나마 특정한 정치적 국면에서만 선별적으로 작동했다. 국적조차 갖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통합보다는 철저한 배제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한국에서는 특히 이처럼 수적으로는 거대하나 정치적으로는 부재하는 '거대한 소수'들에게, 국민국가를 넘어서 민족의 이름으로 동원과 희생을 강요하는 '민족국가(nation state)'의 경향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촛불 이후에 혜화역 집회에 대한 공격, 예맨 난민에 대한 혐오, 심지어 KTX 승무원 정규직화에 대한 2-30대 들의 반응은, 통합과 동시에 배제의 논리로 작동하는 '국민 주권'의 근대적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요컨대, 국민 국가가 완성된 순간에 그것이 국민 주권이 가진 이중적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촛불 이후, 여성과 외국인 등 촛불 내에서는 탄핵이라는 최대공약적이면서 최소주의적인 목표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다양한 정체성 집단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3]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국가가 발휘할 수 있는 근대성은 여전히 선별적 포섭 전략일 것이다. 이른바 혁명 예방적 타협의 방식을 통해, 각각의 정체성 집단에서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혹은 포섭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선별적으로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성과 외국인의 주장이, 나아가 잠재적이지만 곧 드러나게 될 청년이나 노인, 집 없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주장이 과연 과거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을 편입했던 방식으로 '국민 주권'의 이름 아래서 근대적인 방식으로 포섭될 수 있을까?

3. 촛불 이후 정치적인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사회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전환기의 언어들은 헬조선, 노오력, 미개, 죽창 등이다. 이 언어들은 자본주의적 모순의 극대화되면서 사회적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그 결과 오히려 갑질이라는 전(前) 자본주의적 부조리가 만연하면서 근대의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지속되고 있는 저출생 현상은 그동안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했던 사회적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사회체제의 존재 이유가 부정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

2) 2018년 현재 외국인 영주권자들 중 3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지방선거 투표권만 부여되어 있으며 그 수는 18만 명 정도다. 그러나 외국국적 동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투표권자 대부분은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중국 국적의 동포로 볼 수 있고,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3) 혜화역 집회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14일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연대 집회를 시작했다.

황에서 87년 체제가 수립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20세기적 근대성의 한계에 부딪쳤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민주주의, 혹은 정치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 혹은 무엇인가의 재발견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가능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의 발견 역시 곧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방향성에 대한 모색을 해 볼 수 있다.

1) 정치적 대표의 다양화

첫 번째로는 목소리 없는 자들, 곧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한 자들을 공공의 장에서 현시(現示)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피지배층을 지칭하는 개념과 용어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억압당하는 피지배자로서의 민중, 착취당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 분배에서 소외된 몫 없는 자들,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호모 사케르 등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이들이 거대한 소수이면서 공적 공간에서 목소리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을 공적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표(representation)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0세기적 민주주의의 특징은 정치적으로 대표될 자격이 있는 유권자성(constituency)이 선거와 영토, 인간, 위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선거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가 커지고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정치적 대표의 방식과 원리에 대한 급진적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변화의 방향은, (1)선거에서 -> 비선거로, (2)영토에서 -> 정체성으로, (3)인간에서 -> 비인간(자연)으로, (4)위임에서 -> 주장으로의 변화다.

구체적으로 보면, (1)대표가 대표성을 갖게 되는 절차가 선거를 통한 선출에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갈등관계에 있는 소수자들의 참여, 추첨에 따른 무작위 대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2)피대표자의 권리가 근대 국민국가의 영토에 기반을 둔 국민성(nationality)을 중심으로 배타적으로 부여되던 것이 다양한 지구화를 배경으로 한 국제적 이슈의 등장과 협력의 필요성, 국경을 넘어선 인권의 가치 등이 중요시되면서 피대표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3)인간만이 대표될 권리를 가졌다고 보는 시각에서 비인간, 특히 다양한 생물체와 자연물에 이르기까지 피대표성이 확대되었다. (4)이전에는 대표-피대표자 간에 구체적인 위임의 절차가 있어야만 대표성이 있다고 간주되었으나, 누군가가 특정인(사물)을 대표하는 주장을 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대표성을 가진다는 견해가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적인 요소는 대표제에서 오랫동안 잊혀져왔던 유권자(constituent), 혹은 피대표자(the represented)의 정체성과 자격 문제다. 우리는 흔히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권의 실현 수단으로서 투표권이 주어지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유권자이며 이들 만이 대표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개념을 정치적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기준으로 여겨 온 것이 잘못은 아니다. 지역구 소선거구제가 반드시 비례대표제보다 열등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누구에게나 동등한 정치적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은 실로 평등주의적 발상이었는데, 이는 고대 아테네에서 클레이스테네스가 유권자의 개념을 부족에서 거주자, 곧 시민으로 바꾼 것이 그 시초다. 그리고 거주의 개념을 곧 평등한 정치적 권리로 이해한 것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이후 2천년 뒤에나 다시 근대 국민국가에서 나타난 혁명적 개념이었다. 특히 유권자들이 그 제도를 잘 작동시키고 있거나, 정당체제가 이를 통해서 사회적 균열을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다.[4)]

4) 영국이 비교적 그러한 사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영토나 특정 지역구에 기반을 둔 유권자, 피대표자 개념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지구적 무역과 분업, 초국가적 기업들의 출현과 신자유주의적 금융질서, 기후변화, 이민 같은 세계화의 요소들은 비영토적 대표성의 문제를 촉발시켰다. 한 국가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가치들이 충돌하면서 지역적 대표성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대표 개념의 재조직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젠더, 종교, 종족, 민족, 환경 등 가치 지향 같은 집단적 정체성이 정치적 대표를 통해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일부는 실제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단지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 뿐 아니라 그러한 정체성을 스스로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촛불 이후 우리의 민주주의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되고자 하는 목소리 없는 자들의 대표성을 현재의 정당체제, 선거제도, 나아가 정치구조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근대적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탈근대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문제는 다양하다. 우선 지역구 유권자 중심인 현재의 선거제도의 근간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유권자성을 전면적으로 도입할지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논의수준 곧, 단지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의 논의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연동형비례대표제라든지 권역별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선거구 등의 구체적 선거제도를 몇 가지 놓고 적당히 정치적 타협을 해 나가는 수준 이상의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식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우리가 왜 지금 이러한 정치개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실종되기 쉽고, 정치인들은 그 개편 방향에 따라 이합집산과 사보타주를 서슴지 않으며, 국민들은 결국 새로운 선거제도의 가치라는 정치개혁의 내용보다는 정치혐오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있어 정당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의 대표(virtual representation)을 넘어 실제의 대표(actual representation)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연동형비례대표제라도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지기가 없다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제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수를 현재보다 현격히 늘려야 하는 이유들, 입법부의 특권을 줄이되 행정부에 대한 감시의 권한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정당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소수정당과 지역정당이 적어도 기존 정당, 거대 정당들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정당법은 5개 시도이상의 지역에 시도당을 가지며 각각 1천명 이상, 전국적으로 5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창당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당설립조건의 강화는 정치시장에 새로운 정당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당의 소재지를 수도로 명문화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지역정당의 창당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단지 국회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임의적인 교섭단체들에게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등의 문제점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후보의 선택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우선 영국, 미국, 독일 등과 같이 선거 운동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의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는 선거법 자체를 규제위주에서 선거운동 활성화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전제로 한다. 재력이 풍부한 후보자들에게 유리한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후원회의 결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돈 있는 후보, 대형 정당의 후보에게 지극히 유리한 불평등한 정치적 장벽이다.

선거제도,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일반에 대한 현재의 논의에서 크게 누락된 것은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 대한 시민들이 감시와 개입이다.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정당의 자율성 강화와 당원 권리의 확대라는 편형과, 다른 방향으로는 국민경선이라는 포퓰리즘적 편향이 나타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당들이 그 둘 사이를 진동하는 잘못된 관행이 민주화 이후 내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치적 대표의 선출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공천

문제의 핵심은 그것의 투명성이나 결정 주체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권리, 어떠한 가치를 반영하는 후보를 선출할 것인가 하는 대표의 원리에 관한 원칙을 각 정당이 어떻게 세우는가, 그리고 그 원칙을 결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정당이 유권자들 다수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정당들에게 개입할 권리와 의미가 있다.

이상의 정치개혁 보다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대통령, 국회, 행정부, 사법부, 지방정부 및 의회라는 경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대표제의 형식들을 도입하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공론화위원회 등이 일부 실험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치적 책임회피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경향이 강해서, 그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기는커녕 국민들의 반감만 확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민의회나 시민패널, 공론조사 등의 추첨에 기반을 둔 대표제는 정치적 대표성의 측면에서 다양성의 확보라는 장점을 갖지만, 본질적으로 대표-책임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권한 위임의 근거와 절차가 불확실하다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패널들을 조작적으로 선별하기 보다는 최대한 무작위로 선별하고 오랜 시간 동안 열린 논의를 함으로써 장점을 살리되, 결정의 권한은 기존의 대표체계가 갖고 책임 있게 실행함으로써 단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시민참여형 대표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크게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다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정치적인 것'에 대한 도전

촛불 이후의 정치적 과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기반을 두고 그것의 변화와 발전에서 당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대표의 다변화일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또한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정치를 구현하는 배경과 과정으로서,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근대적 민주주의가 가진 논의의 틀,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민주화, 형식적(정치적) 민주화와 실질적(사회경제적) 민주화, 제도의 민주주의와 운동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와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분법적 구획과 단계적인 민주화 개념이 가진 한계에 대한 질문이다. 곧, 더 나은 민주주의가 과연 통합과 배제라는 이분법적인 모순의 근대적 사고방식의 한계 속에서 가능한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87년 이후 우리는 제도화가 가져온 정치적 민주주의의 하향적 마지노선이 제공한 분명한 성과를 느끼고 있는 반면, 그것이 상향적 마지노선이 보여준 제도화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 즉, 근대 민주주의에서 제도화란 특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데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하에서 실제로 무엇이 작동할 수 있는가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에서는 제도화 못지않게 삶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촛불 이후 시민들의 참여 요구에 대한 해법으로 '시민의 정치참여 제도화'라고 쉽게 답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던져야 할 질문은 지금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가 '제도화의 문제인가 아니면 부동산, 교육과 같은 삶의 조건의 문제인가?'라는 질문이다. 즉, 시민 정치참여의 제도화는 일정한 여가와 소득의 보장이라는 근본적인 전제가 먼저 존재할 때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지금 우리가 쉽게 내놓은 '참여의 제도화'라는 해답 이전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소득과 여가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노동 없는 인간의 시대에 탈성장과 공존이라는 인류사의 새로운 미래적 가치를 통해 다시 한 번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가령, 노동 존중의 사회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슬로건이 보여주는 노동-임금 중심의 패러다임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것만으로 충분한가의 논의가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편으로 노동의 존중과 정당한 대가의 보상이라는 과제를 한편으로 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탈노동, 탈성장의 시대에 필요한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20세기가 노동하는 인간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촛불 이후 21세기에는 노동하지 않는 인간의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촛불 이후 우리에게 정치적인 것이, 삶을 지탱할 구조적 기반의 조성과 더불어 탈성장 시대의 탈노동적 삶과 같은 대안적 비전을 동시에 요구한다는 의미다. 또한 이것은 삶의 방식, 삶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에 대한 이해의 변화를 요구한다. 즉, 정치가 다루어야 할 과제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것의 내용과 방향성과 속도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테두리 안에 놓여있는 현재의 논의 구조는 답답하다. 오히려 논쟁의 구도는 성장이냐 탈성장이냐의 문제, 노동 존중과 노동하지 않은 삶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논의할 것은 최저임금과 더불어서 기본소득, 기초자본에 대한 진지하고도 시급한 정책적 공론화다.

50년 전에 우리는 의료보험이 없었다. 40년 전에 우리는 국민연금이 없었다. 30년 전에 우리는 고용보험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 없이 우리는 살 수 없게 되었다. 지금 태어난 세대들은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인구구조를 가진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의료보험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만들었듯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또 100세까지 살게 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본소득은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제도다.

이 제도를 어떻게 계획하고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야말로 촛불 이후, 미투와 혜화역 시위, 민주노총이 주최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시위와 같은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새로운 정치적인 것의 출현에 답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끝〉

노동과 성평등, 그리고 돌봄 민주주의

윤자영 경제학, 충남대

1. 들어가며

시민들의 촛불로 쟁취한 새 정권이 출범한 지 2주년을 맞이했다. 그간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반발을 촛불을 통해 표출하면서 실천적 민주주의를 경험한 이후 사회변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개인들의 삶을 규정하는 정체성의 복합성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 사이에 긴장과 상충관계, 심지어는 모순을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사회 진보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가 필수적이라고 인정하지만 개인의 자유에는 개인이 돈을 마음대로 쓸 자유도 포함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큰 사회에서 이러한 자유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점을 잘 알기에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은 돈이 표를 살 권리를 제한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실시하는 등 개인의 자유에 제약을 가한다. 사회 진보를 위한 가치와 내용에 광의의 합의를 이룰 때조차도 우선순위와 상충관계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할지에 대해 상당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처방의 수단으로 내놓고 있는 최저임금제,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대책 추진 과정에서도 제도 도입으로 인해 득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간의 갈등이 첨예와되고 있다.

사회 진보를 위한 가치와 내용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기 어렵고 이해 집단 간 상충관계를 일으키기 쉬운 영역이 돌봄과 성평등이다. 예를 들어 UN의 지속가능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국제 사회가 채택한 17개의 '새로운 보편적 아젠다'이다[1]. 빈곤 종식, 식량을 확보하고 영양수준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려하는 것과 같은 목표에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겠지만 다섯 번째 목표인'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나 열 번째 목표인 불평등 완화라는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훨씬 논쟁적일 수 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촉발되고 국내에서

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2015.

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Me-too)'운동은 누적된 성차별과 여성 혐오, 가부장제적 자본주의적 물적 토대의 변화와 성평등 의식 간의 지체와 부정합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사회 진보란 사회가 개인의 행복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을 지고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물적 조건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이상이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에 동등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는 계층에게 그러한 참여를 위한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는지 여부는 민주주의의 현주소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 안팎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자는 민주주의 사회의 동등한 시민인가. '고용'을 통한 사회발전 전략은 시장노동 참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며 돌봄노동에 대한 유인을 축소하며 돌봄 노동 수행에 따른 불이익을 심화시켰다. 성장 중심적인 경제 담론은 도덕심과 이타심을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간주하고 가족 내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해왔던 돌봄노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돌봄 노동은 노동력과 사회를 재생산하는 활동에 꼭 필요한 생산 행위임에도 '비경제활동'으로 명명된다. 돌봄노동의 가치는 거시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개인이 치러야 하는 불이익은 성별과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치루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돌봄과 사회재생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윤자영, 2012: 윤자영, 2018). 이 글에서 필자는 우리 사회 진보를 가로막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서 젠더 갈등에 주목하면서 돌봄의 불공정한 배분과 보상이 돌봄을 수행하는 자들의 민주주의적 시민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영역에서 가족을 배제하는 주류 학문의 전통의 영향으로(Wooley, 1993) 가족과 시장 영역의 돌봄은 소위 '경제민주화'의 아젠다에도 오르지 못한다. 가족 안팎의 돌봄 수행자에게 온전한 민주주의적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돌봄 민주주의가 사회진보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노동과 성평등

사회 진보는 모두에게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노동 생산성은 급속도로 증가해왔지만 그 성과는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1% 인구가 소유한 소득의 몫은 1970년대 이후 하위 50%의 평균 가구 소득을 엄청난 속도로 앞질러왔다(Piketty 2014). 대학 졸업자의 중위 소득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금융 부문의 소수 상위에 소득이 집중되어 있다(Folbre 2016). 우리나라에서도 연소득 상위 0.1%에 의사와 금융전문가가 30% 정도를 차지하며 공무원과 서비스종사자는 전무하다(홍민기, 2016).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약 10%대의 낮은 노조 조직률은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낮추어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소비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의 몰락은 저렴한 소비재 수요를 증가시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이해 관계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생산되던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 자본주의적 시장에 편입되면서 여성 내부의 격차는 성평등에서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가 불가피하게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수행하던 가사 및 돌봄 노동의 대체재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여성 저임금 노동이 생산하는 외식가공품과 가사서비스, 육아, 간병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한 집단의 여성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다른 집단의 여성에게 비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성평등이라는 가치 실현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한층 진전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었고 여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차별은 금지되며, 성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해 문화와 제도 전반에서 성주류

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평등의 성취는 모든 여성들에게 보편적이거나 불가역적이지 않다. 노동시장 참여 양태, 소득 격차, 성별 직종 분리 심화, 불평등한 성별 분업, 돌봄 책임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여전히 성불평등은 우리 사회에 공고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노동시장의 '여성화'는 노동시장과 가족 내의 성평등 실현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Standing 1999; Cook and Razavi, 2012).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약화로 남성 가장의 안정적 '가족임금' 체제가 무너지면서 경제적 필요에 의한 기혼 여성의 취업과 가족단위 자영업이 급증했다. 여성 고용률은 2000년 50.1%에서 2016년 56.2%로 증가했지만 불안정 노동은 증가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불안정 노동에 노출되고 있다. 2002년 남성의 23.5%, 여성의 32.9%만이 비정규직이었던데 비해 2016년 남성은 26.4%, 여성은 41.0%가 비정규직으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2] 불안한 노동은 반복적인 취업과 비취업을 야기하며 소득의 불안정성을 수반한다. 근로계약이 불확실하며 임금 수준이 낮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어렵게 한다. 임시일용, 호출, 초단시간 근로 노동자들은 노동관련법의 제도적 보호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적용된다. 불안정 노동은 여성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성 노동자는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호출 노동자, 비공식 가사 사용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여성의 불안정노동자화는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는 성불평등한 환경에서 심화되었다. Hartmann(1976)은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성별직종분리가 결국 여성을 노동시장 내에서 주변적이고 남성보다 낮은 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게 만들어 다시 가족 내 책임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별직종분리를 공고히 하는 것은 기업과 직장 내 남성 노동조합의 공통된 이해관계이기도 하다. 여성의 출산과 양육 책임을 전제로 하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인사 관행은 노동시장 내 성별직종분리를 유지하는 기제이며, 그러한 여성지배직종은 불안정 노동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띠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은 여성을 이직과 재취업을 전전하게 하면서 남성보다 상대적 저임금을 받는 여성으로 하여금 유급 노동과 돌봄을 병행하는 불안정 노동자로서의 피곤한 삶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시간 체제에서 표준근로시간은 가족 책임을 여성에게 부과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강고한 상황에서 특정의 일을 '남성의 일'로 만드는 핵심적 요소이다. 장시간 근로에 종사할 수 있는 남성은 조직 몰입과 헌신으로 경력형성과 승진이 가능한 내부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으로 남게 되는 반면, 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은 보다 시간이 유연한 '여성의 일'에 종사하게 된다. 특정 직무에 대한 남성다운 일과 여성다운 일의 경계가 허물어져가는 대신, 근로시간체제는 노동시장의 성별직종분리를 유지하여 여성에게 가족 내 돌봄을 전담하도록 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제조업과 사무직의 쇠퇴와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대는 노동시장 참여로 여성이 노동권을 행사하고, 복지국가의 시민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노무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갖는 고용주에 전속되어 있는 전일제 공장노동자를 표준으로 하고 있는 '노동', 즉 '고용'중심적 패러다임이 사실상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 가치와 노동을 통한 사회보호를 온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초했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는 변화된 노동시장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지체를 초래하고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 4차 혁명 과정의 일자리 감소,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적 형태의 근로 형태 부상은 새로운 노동과 사회 보호 패러다임 전화를 요구하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에서 노동시장 내의 성별직종분리는 오히려 증가했다. 고학력자 중심의 사무직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여성 고용은 저임금 서비스, 특히 돌봄 관련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 돌봄 관련 직종은 보상과 경력에 따른 임금 인상이 어

2) 『2017 KLI 노동통계』 인구 및 고용

렵다(윤자영, 2018). 성평등적인 복지 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스웨덴도 돌봄 직종의 여성 집중화로 인해 성별직종분리 지수가 높다(Cook and Razavi, 2012). 우리나라에서 돌봄 직종의 부상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돌봄 노동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킨 것이 계기이다. 2007년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은 아동보육, 요양보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방과후돌봄, 아이돌보미, 산모신생아돌보미, 노인돌봄바우처, 가정봉사원, 간병인등 다양한 영역의 여성 노동자를 등장시켰다. 최근 여성취업자 증가는 보건사회복지업의 일자리 증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2007-2014년 여성취업자 증가분의 87%에 해당하는 814천 명이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 취업했다(정성미, 2014).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는 돌봄 직종의 정책적 지원이 아니었다면 매우 더디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돌봄노동자는 대표적인 불안정노동자이며 자신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참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불안정 노동을 구조화하면서 민주주의적 참여를 배제하는 근본적 원인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다. 바우처제도는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이용자가 시장에서 돌봄서비스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 위탁자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공급자,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간에 불명확한 근로관계를 형성한다. 재가요양보호사의 소득과 고용은 모두 불안정하다. 서비스 제공기간 중에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요양보호사에게서 서비스를 받고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때. 다른 이용자와 연결되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감소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해야 하므로 일자리 자체뿐만 아니라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불안정하다(윤자영, 2018). 고용형태와 임금(소득)이라는 두 축으로 노동의 불안정성을 정의했을 때 사회서비스 노동의 불안정성은 매우 심각하다(백승호 외, 2016).

여성 경제활동 참가는 성별 분업 패턴에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거보다 무급 노동에서 성별 격차는 감소했다. 남성의 돌봄 참여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이중 노동(double day)과 친인척의 돌봄 없이 소위 여성의 일가정양립은 불가능하다. Matthaie(2001)에 구분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성역할 자유(gender freedom) 단계에 있다. 성적 자유 이전의 성별 관계는 성역할 양극화 (gender polarization) 단계인데, 성별 노동 분업의 경계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남성은 가족을 위한 생계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쟁을 통해 타인을 종속시키는 데 몰두하고 여성은 가사 노동을 통해 가족 구성원의 필요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반응하고 그에 자기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이다. 성역할 자유(gender freedom) 단계는 성별 양극화에서 나타나던 엄격한 성별 분업이 와해되는 단계이다.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전통적인 남성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면서 경제적 독립과 경쟁을 통한 커리어 구축이라는 남성적 자질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여성 집중 직종에 진입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처우가 남성에 비해 열악하고 차별도 존재한다. 문제는 극히 소수의 남성만이 돌봄을 기꺼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역할 자유 단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도 성역할 양극화 단계의 남성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성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성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경쟁, 시장 중심주의, 극단적 이윤 추구 동기가 배태하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고 있는 것이다.

성역할 자유 단계에서 자본주의는 여성에게 가부장적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했지만 동시에 여성을 포함한 모든 개인이 사회 재생산에 힘과 노력을 헌신하는 행위에 불이익을 주는 경쟁 압력도 가중시켰다. 여전히 돌봄 책임을 배타적으로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 가족이 사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돌봄노동은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않는 여성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시장노동을 통해 자립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돌봄 책임과 비용을 개별 가족과 여성의 몫으로 전가하면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돌봄노동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돌봄노동을 회피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돌봄

노동 가치의 저평가에 대한 성찰 없이, 돌봄노동의 공백을 돌봄 직종 인력으로 메우기 위한 노력은 돌봄노동의 상품화로 귀결되었다. 소득 불평등의 증가와 잠재적 저임금 노동 공급이 확대되면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계층에 따른 가족 돌봄 책임의 불평등한 재분배를 야기하고 있다.

돌봄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Matthaie(2001)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성역할 통합(gender integration)이라는 다음 단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단계는 남녀 모두 유급과 무급 노동을 통합하고 여성성과 남성성의 자질을 통합하고, 경제 체제가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에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Matthaie(2001)가 주장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 돌봄노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등한 의사결정 참여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과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마지막 단계로 이동할 것인가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다.

3. 돌봄 민주주의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성평등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돌봄노동의 가치를 간과하면서 여성의 임금 노동 참여를 통해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거쳐 온 과정들은 결코 진정한 남녀 평등을 이루는 데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 하나의 이유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며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인간에겐 자립과 자조 말고도 협동과 돌봄의 욕망도 함께 존재한다. 시민권의 핵심적 자격요건에 돌봄 수행을 포함시켜야 하며 기존의 여성의 일이라 간주되었던 돌봄노동은 남녀 모두의 기본적인 시민적 역할로 재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노동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개인의 자유의 확보뿐만 아니라 가정과 시장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자의 민주적 참여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시장노동과 돌봄노동을 둘러싼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민주주의는 권리의 집합을 의미하며 "의무"나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 조앤 트론토는 민주주의 정치가 돌봄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민주적 시민은 돌봄에 대한 책임을 분배하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Tronto, 2013). 그에 따르면 돌봄과 민주주의는 서로의 가치를 그 핵심 개념으로 삼고 있으며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모든 사람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서로를 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누구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필수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실천과 진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누군가에 의존하는 개인이나 의존하는 개인을 돌보는 사람들에게서 시민의 자격을 박탈하고 차별하고 배제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돌봄 책임을 분배하는 것이며, 이러한 돌봄 책임을 민주주의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아직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돌봄 책임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돌봄에 직간접적으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olbre(1994)가 주장했듯이 돌봄노동은 공공재이다. 일상적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지 않아도 돌봄을 제공하느라 온전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공짜로 편익을 누린다. 현재 사회경제체제는 일부 사람들이 돌봄노동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회피하지만 편익을 누리는 돌봄의 '무임승차권'을 발매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과제가 된다면 돌봄의 '무임승차권'은 회수해야 한다(Tronto, 2013). 국가는 돌봄의 필요를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다수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돌봄 민주주의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시장노동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정책은 가족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을 시장노동과 동일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념을 재생산한다. 정책이란 '좋은'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추구한다. 한 가지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른 행위에 대한 저해요인이다. 유급노동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여성을 남성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돌봄의 책임이 없는 독립적인 근로자로 간주하면서 돌봄노동의 사회적 필요성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고용을 우선 순위의 맨 위로 배치하는 정책은 시장 노동만이 생산적이고 돌봄은 비생산적이라는 가정에 입각한다.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을 모두 생산적이고 민주적 시민의 기본적 역할이라 상정한다면 둘 다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이 필요하다. 윅스(2016)는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혹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일할 수도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이 성평등을 위해 더 많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남녀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주당 40시간 표준 근로시간은 포디즘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인 시대에 정규직 중심의 고용 관계에서 배태된 것이며, 당시 가족 임금과 사회권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규제는 유급 노동 말고 다른 종류의 노동은 생명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아 가사노동 시간은 필요없고 개인 노동자에게 약간의 수면과 쉼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남성 생계부양자와 가사노동을 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아내가 있는 가구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근로시간체제를 유지하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가족 안팎에서 성평등을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여성을 끼워 넣는 '일가정 양립' 모델은 여성의 이중 노동과 돌봄의 상품화라는 불가피한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시장 단축을 통해 민주적 시민이 돌봄 책임을 분배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의 '시간 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일가정 양립에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는 특정 일 또는 특정 주에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선택권보다는 기업 수요 측의 요구로 더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족 책임을 가진 근로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성의 가족 책임과 근로 현실을 반영한 근로시간체제는 일일 근로시간 단축을 강조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5일 6시간 근무, 근로시간대 조정, 야간 혹은 휴일 근로 제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유급의 돌봄 노동에 대해 국가는 재정만 지원하고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시장화를 추구했다. 돌봄노동 수행자가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Folbre, 2006). 노인,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자 등 의존자는 자신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서비스 질이 좋아지려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실질적인 구매자인 보호자는 의존자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질을 개선할 아무런 유인이 없다.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가장 잘 아는 돌봄노동자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서비스의 질과 돌봄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하던 제조업과 사무직 노동자에 맞춰져 있는 노동 과정에 적용된 근로기준과 사회보호가 돌봄노동에 확장, 적용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가능성과 고용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소득은 일, 생산, 복지에 대해 근로연계복지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출발점은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이 노동시장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또는 타인의 임금소득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인간적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일정한 물적 조건이 제공되는 사회'라는 데에 있다(Van Parijs, 1995). 기본 소득은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불함으로써 '생산'적인 행위를 시장노동에 한정해서 사회권과 사회보호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을 지양한

다. 기본 소득은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가족구성원들이 상호 경제적, 정치적 지배-종속 관계에 놓이지 않으며, 가족의 물질적, 정서적 복지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노동이 강제적 분업이 아닌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의해 수행되고, 그리하여 그 구성원들이 평등, 민주주의, 상호의존 등의 미덕을 일상적 삶을 통해 익히고 구현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가족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제도는 성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돌봄 노동의 특수한 성격이 야기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기본소득 제도가 여성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천착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윤자영, 2018).

여성의 시장노동 참여와 돌봄의 사회화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가정에서 여성을 주된 돌봄 수행자로 묶어두려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기제와 규범은 강고하다. 개인의 '선택'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떤 행위에 대해 좋고 싫음을 바꿀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사회의 가치와 규범 체계의 제한을 받는다. 인간은 상호의존적인 존재로서 돌봄을 제공하고 제공받을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선호가 형성되어야, 남성과 여성 모두 시장노동과 돌봄노동 참여라는 시민적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다. 성역할과 돌봄 관련 규범에 대한 문화적 영역의 협상이 필요하다.

4. 맺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남녀 모두의 책임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며 삶을 유지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인간에겐 자립과 자조 말고도 협동과 돌봄의 욕망도 함께 존재한다. 그러나 성불평등의 기저에 돌봄의 불평등한 분배와 대우가 자리하고 있다.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사회경제적 권력 관계에서 보통 약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가 수행하는 돌봄은 그 수행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보상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그 결과 낮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된 돌봄을 수행하는 자는 더욱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력 관계에 놓여 민주적 시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인과 사회에 필수불가결인 유급과 무급의 돌봄노동의 책임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진보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젠더 갈등을 해소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 돌봄을 '경제'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가족 안에서 그리고 이해관계자 (국가, 시장, 가족, 공동체) 간에 돌봄 책임과 비용을 민주적으로 재분배하여 경제민주화를 이룰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참고문헌

- 백승호, 안주영, 이승윤. (2017).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시장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4(2), 1-29.
- 윤자영. 2012. 성장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과 지속 가능한 발전. 29(1): 217-246.
- 윤자영. 2018. 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한국사회정책, 25(2): 31-55.
- 윤자영. 2017.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와 과제. 희망제작소 포럼 발표문. 2017. 11.27.
-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2016.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사회정책, 23(2), 201-237.

■ 정성미. 2014.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과 최근 변화. 노동리뷰, , 5-19.

■ 홍민기. 2016. 최상위 소득집단의 직업 구성과 직업별 소득 분배율. 「사회경제평론」 29(3): 27-50

■ 케이시 윅스. 2016.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제현주 옮김. 동녘.

■ Cook, Sarah and Shahra Razavi. 2012. Work and Welfare: Revisiting the Linkages from a Gender Perspectiv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search Paper No. 2012-7

■ Folbre, Nancy. (1994). Who pays for the kids? : gender and the structures of constraint. London ; New York: Routledge.

■ Folbre, Nancy (2006), "Demanding Quality: Worker/Consumer Coalitions and 'High Road' Strategies in the Care Sector," Politics and Society 34(1), pp. 1-21.

■ Heidi Hartman. 1976. "Capitalism, Patriarchy and Job Segregation by Sex" in 〈제3세계 여성노동〉 창작과 비평사.

■ Matthaei, Julie. 2001. Healing ourselves, healing our economy: paid work, unpaid work, and the next stage of feminist economic transforma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33, 461-494.

■ Piketty, Thomas.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tanding, Guy. 1999. "Global Feminization Through Flexible Labor: A theme Revisited," World Development 27(3), 583-602.

■ Tronto, Joan. 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NYU Press.

■ Van Parijis, Philippe. (1995), Real Freedom for All: What (if Anything) Can Justify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ooley. F. 1993. "The Feminist Challenge to Neoclassical Economic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7. 485-500

종합토론

촛불 혁명 2주년 학술 토론회

김상봉,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_저항에서 형성으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촛불 이후, 정치적인 것들의 정치적 귀환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돌봄적 혁명, 정원을 가꾸는 마음으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오늘공작소 대표

김상봉, "한국 민주주의의 패러다임 전환 _저항에서 형성으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 전쟁상태에서 정치적 상태로?

발제에서 김상봉 교수가 한국사회를 국가기구와 민중사이의 잠재적인 전쟁상태로 정의한 것에 공감한다. 김동춘 교수도 한국의 정치과정을 전쟁정치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1] 외부의 전쟁 혹은 적을 빌미로 정치적 반대파들을 내전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2] , 내부의 정치적 상대를 절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행태 등은 테러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 국가보안법 등에서 이미 보편화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현대국가의 일반적 특징일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났었고,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이런 국가폭력 행위는 예외 없이 반복되었다.국정원·기무사·경찰의 국민에 대한 심리전과 친위쿠데타 기획, 노조파업에 대테러 특공대 투입,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테러방지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촛불혁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적으로 시작되고 평화적으로 종결"되었고 이것이 "한국 사회가 그런 기도를 허락하지 않을 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 촛불은 "항쟁으로 시작했으나 마지막에는 항쟁을 지양해버린 사건"이라는 설명은 탁견이다.

하지만 "본질적 전쟁상태로부터 정치적 상태로 이행"했다고 단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먼저,

1) 김동춘, 전쟁정치-한국정치의 메커니즘과 국가폭력, 길, 2013 참조

2) Farhad Mazhar, "War against Terror: Sign of Coercive Presence", War on Terror and Asian Democracy, SDMA (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Kwangju, ROK. 2011)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정상적인 국가' 혹은 '정상적인 정치적 상태 속에 있는 국가'가 개념적으로든 현실에서든 존재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도리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적 상태와 전쟁상태 사이에 본질적 구분이 없다고 봐야 할지 않을까?

둘째, 과연 '구성원들의 사적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그 상대편을 적으로 간주할 때 내부적으로 전쟁상태에 빠져드는 것이고, 대립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선의의 경쟁자로 존중하고 이런 '대립이 공공적 선을 위해 이바지' 할 경우에는 정치적 상태로 이행한 것이라는 설명은 타당한가? 현대국가에 전쟁상태와 정치적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예외가 일상화된 분단국가에서 전쟁적 상태가 정치적 상태, 김상봉 교수의 표현대로라면 "모든 차이와 대립이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는 상태"로 이미 이행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은 아닐까? 이 경우 '폭력'의 정의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 검찰, 비밀정보기구, 군대, 기타 구조적 폭력이 사라졌거나 평화적 혹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태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될 수 있다.

2. 혁명인가? 불가역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쟁이 국가와의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지 않았고, 시민의 평화적 시위와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일단락되었고, 적어도 군대나 경찰 그리고 정부 기구에 속한 상당수 구성원들 역시 성숙한 민중의 일부로서 헌정질서의 파괴를 막아냈다는 점을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겠다. 이 점에서 촛불이 헌정질서를 획기적으로 바꾼 혁명은 아니라하더라도, 이 나라에서 헌법을 헌법답게 작동하도록 한 기념비적 시민행동이고, 그 점에서 이 과정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동의한다.

이는 촛불 혁명 이전의 한국을 '분단 체제'의 한계에 따른 '이면 헌법'이 존재하던 시대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헌법이 존재했음에도 분단 체제의 숙명 때문에 "반공, 반북을 위해 헌법이나 법률을 안 지켜도 된다는 오래된 관행"이 작동해 왔다고 보는 백낙청 교수의 주장[3]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여겨진다. 백낙청 교수에 따르면, "촛불집회가 이면헌법의 작동을 일단 정지시키고 민주적인 성문(成文)헌법을 가동해 박근혜 정권을 끝장냈다"고, 따라서 "촛불 항쟁은 헌법이 안 지켜지던 나라를 헌법이 지켜지는 나라로 바꾸는 본질적인 혁명이며 그렇게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일종의 혁명 정부"라는 것이다.

김상봉 교수는 이런 시민의 '성숙'을 가져왔던 200여 년 한국 민중항쟁사의 두드러진 개성이 '정치적 운동이 민중의 자기 교육과 결합되어온 것'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한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적 저항에 의해 항쟁이 일어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민중적"이라고 평가한다. 공감할만한 주장이다. 적어도 한국 민중항쟁들이 정치정당에 기댄 바가 적은 것은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이다.

---

3) 백낙청, 2018. 5. 24. 촛불 항쟁 국제토론회 기조발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공동 주최, 〈프레시안〉, 〈한겨레〉, 〈오마이뉴스〉 후원

그런데 '종교나 철학 같은 정신적 삶의 원리가 정치적 혁명과 결합'해 온 것, 혹은 "혁명적 영성"이 작용했고 이것이 한국적 '민중혁명'의 고유성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유럽의 정치적 변혁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묘사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로 인해 반동적 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단정하는 것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의 그것이 정치정당과 긴밀히 연결되지 못한 것은 우리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취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때마다 보수적인 기존의 정치세력에 의해 항쟁의 성과가 찬탈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항쟁의 길로 나아갈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해 김상봉 교수 자신도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겨레의 내적 성숙에 의해 성립된 제도나 사회적 진보는 외적 조건이 변한다 해서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장기지속적-거시적 전망으로서는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내적 성숙을 반영할 제도의 보완이나 구조의 개선을 절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전제하는 바탕위에서만 유효한 주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촛불혁명이 "자기 불신, 자기 부정, 자기 비하의 감정을 널리 퍼트려", "정치를 불신하고 냉소하며 스스로 정치에 무관심하게 해왔던" 것이 "한국인들의 오랜 대외적 열등감"이라는 필자의 지적에 적극 동의하면서도, "이 이즈음에 와서 거의 극복되었다"는 지적에는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역시 전쟁상태에서 정치적 상태로 전환했다는 판단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되는 논점이다.

필자의 탁견대로 "내적 전쟁 상태와 외적 식민 상태는 한국 사회의 상시적 본질"에 속하고 "우리가 원한다면 불의한 현실을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좋든 싫든 미국과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과 매판정치세력들을 약화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의 분단정전체제와 그 속에서 작동해온 낡은 선거제도와,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과두제 정치를 그대로 두고 다가올 총선을 통해 이들 정치세력이 소멸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주관적 기대가 될 수도 있다.

3. 서로주체성, 형성, 공속

김상봉 교수는 "인간은 오직 자신의 삶의 세계를 형성함으로써만 현실적으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촛불 이후 '새로운 나라의 형성'이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고 말한다. 김상봉 교수는 글에서 "자기를 주체로서 형성한다는 것과 자기가 속한 나라를 스스로 형성한다는 것은 공속한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 '형성'과 '공속'은 사회변혁을 가능케 하는 서로 주체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민중과 시민을 각각 구분하여 촛불을 계기로 억압받고 저항하는 민중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형성하는 시민으로 탈바꿈했다는 지적에는 쉽게 공감하기는 힘들다. 우리는 여전히 민중이면서 시민인 존재가 아닌가? 특히 김상봉 교수는 시민을 자기 형성과 나라 형성의 정치적 주체로 상정하는데, 그 맥락과 긍정적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받아들이기 조심스럽다. 시민이란 본디 시민권을 가진 주체라는 뜻으로, 우리 공동체 내에 이미 법률적으로 시민인 자 외에 법률적으로 시민 아닌 자도 상당수라는 점에서 이 단어를 민중과는 다른 의미로 일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번 촛불혁명이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나라다", "네가 나라다"라는 자긍으로 귀결된 것에 주목하여 '형성', '공속', '서로 주체성'의 발현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설명하고자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 크다. 다만, 필자가 강조하는 '서로 주체성'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서로 주체성은 과연 서양의 진보를 이끌어 온 이념이 아닌,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통인가? 김상봉 교수는 서양의 진보를 이끌어 온 것은 개인의 자유, 혹은 각자의 권리의 균형을 중심에 두는 사유였고, 우리나라의 그것은 너와 나의 인격적 만남에 기초한 사유로서, 타인의 슬픔에 자신의 존재를 걸고 응답하는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고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서양에서 발전해온 권리에 관한 사유도,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그리고 소수자 집단의 권리, 환경과 평화 등에 관한 개인적 집단적 권리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인권기반 접근은 권리주체 중 가장 취약한 주체의 권리에 주목하고 이들의 개인적 집단적 권리를 가로막는 다양한 구조적 사회심리적 조건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둔다. No on left Behind라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슬로건이 타인의 슬픔이나 너와 나의 인격적 만남에 기초한 사유를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4)]에도 타인의 슬픔이나 너와 나의 인격적 만남에 관한 강력한 지향을 쉽게 읽을 수 있다. 또한, 비록 과문하지만, 서양 철학에서도 20세기 들어 존재와 관계와 인식의 문제, 공속 혹은 존재의 연루에 관한 문제, intersubjectivity, becoming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 "다른 모든 단절의 심연에 앞서 (이를테면 노동과 자본,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또는 학벌의 차별에 앞서) 하필이면 남한과 북한 사이의 단절을 극복하는 만남의 길이 가장 먼저 열린 까닭"이 과연 "내가 자유로운 형성의 주체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형성하는 국가가 주체적이지 않으면 안되는" 원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개인으로서 나와 너의 시민적 주체성과 국가의 주체성 다시 말해 국가의 주권은 적어도 그 본질에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뗄 수 없이 공속"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른 시민적 주체성과 연관된 사회적 노력에 앞서 국가의 주체성을 세우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속'과는 무관한, 국가적 의제를 시민적 의제 앞에 세우는 일종의 서열화라는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사유는 좀 더 유연하게 적용된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김상봉 교수가 피력한 바 "오직 남북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갈 때만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다시 이 나라를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고 자신들은 그 식민통치의 대리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위탁받아 나라 안에서 왕 노릇하는 매판적 정치세력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촛불혁명의 성공 이후 한국 사회가 다른 무엇보다 국가 주권의 확립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종의 역사적 필연"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까닭이 "국가가 주체적이지 않다면 시민의 주체성 역시 결코 담보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면 곤란하다고 본다. 이는 마치 어떤 절대정신 혹은 시대정신이 있어 그것

4)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는 일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는 자유입니다. 하느님과 형제자매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유이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기쁨이 가득한 희망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신적 쇄신을 가져오는 풍성한 힘이 되기를 빕니다. 그들이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에 맞서, 그리고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기를 빕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들을 거부하기를 빕니다. 생명이신 하느님과 하느님의 모상을 경시하고, 모든 남성과 여성과 어린이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빕니다." 「교황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강론 전문」, 노컷뉴스, 2014. 08.15 http://www.nocutnews.co.kr/news/4074370

이 자기를 발현해나간다는 식의 설명으로 오해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민의 주체성이 없으면 국가가 주체적일 리 만무하다는 식으로 거꾸로 서술해도 무방한, 그저 그런 일반적 명제에 불과할 터이다.

셋째, 김상봉 교수의 서로주체성의 구현이 시민에 적용되는 것인지, 인간 공동체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생명이나 사물과의 관계도 포괄하는 개념인지 좀 더 토론될 필요가 있다. 발제문 속에서는 불분명한데, 다분히 개인과 국가, 또는 '나와 너의 시민적 주체성'과 '국가의 주권'과의 관계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느낌이다. 김상봉 교수의 '너도 나라다'라는 사유 속에 이주민이나 망명인이 들어설 여지가 있을까? 물론 이들을 포함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여지가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극도로 낮은 출산율과 지구화, 그리고 지구촌에 점점 많아지는 재난과 무장 갈등으로 인해 이 나라는 다양한 문화와 집단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생태적 지속가능성,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존재들의 서로 주체성에 관한 의제설정, 혹은 주체설정은 더 이상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풍부한 철학적 사유가 촛불혁명에 대한 논의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4. 이론의 총체성과 주체의 이념

김상봉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남북문제와 국가 주권의 문제에 대해 다른 어떤 문제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거부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정신의 자연스런 구현"이라고 적극적으로 의미부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이 재벌가문의 노예"가 된 기업국가의 모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김상봉 교수 스스로 '파멸을 부르는 비극의 씨앗'이 촛불 정부 혹은 촛불혁명을 이룬 우리사회 내에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같은 모순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 와서 재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개탄 외에 적절한 설명이 없다. 사적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는 전쟁상태를 벗어난 '정치적 상태'로의 불가역적 이행, 그리고 시대정신의 구현과 이 역사적 아이러니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김상봉 교수는 기업국가로부터의 출구를 남과 북이 "서로를 폭력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던 역사를 끝내고 두 체제가 평화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에서 찾고 있는 듯하다. 그 경우 "남한은 북한을 따라 경제의 공공성과 국가의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북한 역시 남한을 따라 정치의 공공성과 시민적 주체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서로에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5] 서서히 서로에게 '너도 나라'는 고백을 할 날이 올 것"이라는 통일과정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남한의 재벌독점경제체제와는 다른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게 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공공성을 결합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또한 "북한의 철학적 경직성이 그 사회의 취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남한의 철학적 무국적성과 몰주체성이 북한

5) 응답과 배움은 서로주체성의 본질적 계기들이다. 김상봉, 『서로주체성의 이념』, 296~300쪽.

의 철학적 주체성을 이길 수는 없다"는 진단은 과연 타당한가? 북한의 철학이라는 것은 지배집단의 통치이데올로기이다. 반면, 남한의 민중들 혹은 시민들이 발휘한 '서로주체성'에 대해서는 김상봉 교수 스스로도 큰 의미를 부여한 터다. 남한 시민들이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통해서 발휘한 놀라운 저력 혹은 '영성'이 전통적인 배경을 갖는 것이든 혹은 국제적이고 지구적인 배경에 의한 것이든 이것을 북한 주민들의 철학적 주체성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비교되는 것은 시민 또는 주민들의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국가철학의 필요성을 일컫는 것일까? 북한의 주체사상이 싫다면 우리가 다른 주체의 이념이라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철학자의 강박관념일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 시민들의 철학함은 촛불을 이끌어 낸 것으로 발휘된 것이고, 나머지는 정치인과 철학자가 해결하고 해석해내야 할 일이다.

다만, 김상봉 교수가 지적한대로 이론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 총체성이란 한국의 사회운동과 한반도의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그 일부로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 거기에 '공속'하면서 분투하는 전세계 민중들과 한반도 민중의 '형성'과정을 이론 속에 포섭함으로서 확보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파가 권력의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좌파는 이론의 사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은 통렬하다. 하지만, 서양과 동양을 구분하거나 외세와 우리를 구분하는 것은 자칫 그 총체성을 놓칠 수 있다.

5. 촛불의 고유성과 보편성, 가능성과 위기

기실, 전체적으로 김상봉 교수가 묘사한 한국민중항쟁사의 특징이나 거기서 발현된 서로 주체성에 대한 사유에는 공감하는 바 크다. '공정함과 권리의 균형'을 강조하는 것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도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그러한 특징이나 거기서 발휘된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행동은 다른 한편에서, 지구화된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그 한반도적 형태인 분단체제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촛불혁명은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가 지구적 수준의 위기를 거쳐 점점 '재난자본주의'적 특징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북아 전후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요동치며 군사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혁명이다. 김상봉 교수가 묘사한 전쟁상태의 국가, 혹은 정치의 내전화 경향, 사회적 갈등의 분출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역시 한반도적 특징이자 전 지구적 특징이며, 근대국가에 내재된 특징이자 신자유주의와 테러와의 전쟁을 거치고 '탈산업화'하는 국면에서 현대국가가 보이는 보편적인 특징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은 자유로운 동시에 위태로운 시민들이었고,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지역이나 나라별로 저마다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징이다. 그렇게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불법을 저지를 수사정보기구를 비롯한 국가기구의 적폐청산을 시도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하면서 미국과 북한의 사이에서 위태롭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 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이 방향에 대한 거대한 저항 외에도 정부 스스로 구체적인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부는 동시에 미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군비를 확장하고 군수산업을 살찌우면서 우리 군대의 지역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상충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기도 한 재벌 총수를 사면하고, 어제까지 국민을 사찰했던 비밀정보기구들을 이름만 바꾸어 사실상 면책하고 도리어 국가가 수집한 시민의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제를 완하하여, 사회적으로 국가정책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정보 권력화를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서두르고 있다. 대의제도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

지 않고 있고 정치개혁이나 개헌을 위한 논의도 국회에만 가면 멈춰서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한반도의 평화도 여전히 기로에 서 있다. 이 상황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론의 총체성, 사유의 총체성이 필요한데, 그것이 '한반도에 고유한 새로운 주체의 이념'이라는 김상봉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총체성은 우리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시야를 전지국적, 자연을 포함한 세계 전체로 확대하고, '국가'나 '민족'라는 전통적 우선순위에 맞서는 민초들의 새로운 우선순위를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론〉 촛불혁명과 자유롭고 위태로운 세계의 시민들[6)]

촛불혁명은 이 나라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참여민주주의 전통을 잘 보여주지만 동시에 대의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기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고비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2000년대 이후에도 2002년, 2004년, 2008년, 그리고 2016년에 이르기까지 주기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난 것도 민의를 반영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체제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촛불혁명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무엇보다도 낡은 냉전분단체제와 연관이 있다. 역대 보수정권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수준 이하의 극우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해왔다. 촛불혁명 과정에서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서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극우적 혐오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의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승자독식의 과두제 정치제도 때문이다.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는 서로 대결하면서도 의존하는 과두정치를 낳고, 정치의 주인인 주권자를 소외시키며, 다양한 민의를 단순대결구도로 왜곡한다.

자유롭고 위태로운 '나들'의 행동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여러 면에서 자유로운 시민들이었다. 대의제도가 결코 그들을 대변해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유'로웠고, 국가가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결코 돌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복지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사회적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국가가 강요해온 획일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웠고, 특정 정당에도 종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주권자들이었다. 그들은 기존의 정당체제나 조합, 전통적 공동체 같은 사회조직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자유로워서 위태로운 사람들의 자구적 행동이었다.

촛불혁명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파괴 행위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박정희 시대, 즉 개발독재 시대에 대한 환상도 함께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동상도, 국정교과서도 이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순 없을 것이다. 앞으로 '국가이익'이니 '국가안보'니 하는 실체 없는 공문구를 앞세워 주권자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고 주권자 위에 부당하게 군림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이 변화를 단지 보수에서 진보로의 이동으로만 설명해서는 곤란하다. 특정 이념과 진영으로부터 자유롭고,

---

6) 이하는 졸고, "시론: 촛불혁명 이후의 사회운동" 중 오늘 논의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이 글은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최하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주관한 촛불 항쟁 1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2018년 5월 18일~19일)에서 발표되었다.

전통적인 가치나 우선순위와는 명백히 다른 프레임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자유로운 개인들 혹은 '나'들의 등장을 눈여겨보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의 흐름을 놓칠 수 있다. 행동하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한 '나'들이야말로 촛불혁명의 주역임과 동시에 촛불 내내 지속되었던 무대와 광장 사이의 긴장의 한 축이었다.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의 시민행동주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화적인 행동은 신자유주의 말기의 퇴행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시민들에게 행동해야할 이유를 보여주는 대안적 사례의 하나로 자부할 만하다. 오늘날 전세계가 시대 교체를 둘러싼 전환의 갈등을 겪고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가 일파만파 세계 금융위기로 발전하자, 미국을 비롯한 각 나라 정부들은 뒤늦게 '낙수효과'와 '민영화'에 기댄 경제정책의 패착을 인정하고 경제개혁과 복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킨 주범인 금융자본은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회생하는 반면, 위기의 고통은 소수의 특권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는 세계화의 결과로 더 극심한 불안정과 전쟁, 사회적 양극화와 결핍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변부 국가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1년 봄 아랍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위, 그 해 여름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럽을 강타한 분노의 행진들, 가을의 월스트리트 점거시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악화시켜온 경제위기와 양극화, 자유주의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폭력과 특권과 반칙에 대한 저항이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전후 한국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해고노동자, 대학생, 재개발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몰린 농민들, 핵발전소나 송전탑 건설, 기지건설 등으로 쫓겨난 이들의 시위가 이어져왔다.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지자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의 확대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는 사회적 합의로 인식되고 있었다. 재벌대기업의 횡포, 검찰의 정치화, 정보기구의 시민사찰에 항의하는 시민운동도 이어져왔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당의 후보로서는 획기적으로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내걸었을 때, 정부와 정치권은 최소한이나마 스스로를 시대에 맞게 개선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선을 위한 이미지 전략에 불과했고 약속했던 '보수판 혁신'은 일어나지 않았다. 2013년 늦가을, 대학가에 '안녕들하십니까?'라고 자문하는 대자보가 나붙어 큰 호응을 얻었다. 마치 다음해 봄에 일어날 세월호 참사와 그 뒤의 촛불시민혁명을 예고라도 하듯이,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겠느냐고 묻는, 조용하지만 통렬한 질문이었다. 그 후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결코 안녕하지 않은 현실을 다시금 확인했고, 결국 지체된 시대교체의 요구가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노도가 되어 봇물 터지듯 촛불혁명으로 분출된 셈이다.

재난의 역설, 위기의 역설 - 퇴행의 가능성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2000년대 중반 이후 주류경제학 조차 이 사조와 체제의 위험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기 이후의 세계가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평화롭고 생태적으로 조화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극단주의와 군사주의가 새롭게 발흥하고, 사회적 약자들간 차별과 혐오가 격화되는 한편에서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며, SNS를 통한 전자민주주의를 구가하는 이면에서 새로 등장한 정보권력이 시민의 모든 데이터를 독점하고 사찰하는 신자유주의의 말기의 퇴행 혹은 전환의 교착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본주의가 야기한 위기와 재앙 이후에도 체제개혁이 좌절되고 도리어 더욱 퇴행하기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 사회

적 자연적 대재난 이후에 도리어 지배체제가 재생산되는 현상을 '재난자본주의[7]'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권적 지배층들이 시민들의 충격과 공포를 이용해 사회개혁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효과에 대해 냉소하게 함으로써 기득권 유지에 동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양극화와 정치의 기능부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절망의 내재화는 사회구성원간의 혐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기제로 작용한다.[8]

이 점에서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여전히 급격한 후퇴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가르는 미묘한 경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는 고비를 시민들의 평화롭고 건설적인 연대로 비교적 슬기롭게 넘어선 셈이지만, 우리사회와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구조적인 위기들, 특히 절망을 내재화할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와 대의제의 오작동 등 같은 본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거나 더 큰 퇴행을 예방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세계화와 탈산업화

문제해결의 어려움은 갈등의 원인이 세계적 수준에서, 새로운 기술적 산업적 전환과 더불어 확대재생산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는 국경을 넘어서는 금융자본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로, 국경 내의 노동과 시민에 대해서는 통제장치로 기능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세계화는 일국 내에서는 도시와 농촌, 세계체제에서는 중심부와 주변부를 분리시키고 각각 후자를 식민화한다. 이 과정은 대부분의 나라의 산업을 특정 제조업, 단일 품종 중심의 대규모 농업, 사치품 생산 혹은 서비스 산업 등 세계적 차원의 분업구조로 분절화시키면서,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산업의 흥망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사회공동체의 파괴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특히 '4차 산업'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탈산업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생산성의 향상에 조응해 소득 분배구조나 노동조건의 변화가 뒤따르지 못해 실업과 불완전노동이 증가하고 경제력이 집중되는데 반해 전통적인 계급적 연대감은 희석되는 불균형이 심회되고 있다. 소득의 수준과 상관없이 '모두가 비정규직'이라고 느끼는 불안감은 탈산업사회의 노동자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대다수가 '교육된 불안정 노동자(Cognitive Precariat)'[9] 인 사회에서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과는 여러모로 구분되는 '다중경제자아(multiple economic selves)'를 지닌 시민들이 정치적-경제적 주체로 나서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최근 유럽에서 급성장한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이태리 5성운동(Movimento 5 Stelle), 프랑스의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 La République En Marche)현상 등 전통적인 좌우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정치세력들은 한층 똑똑해진 시민주체를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과 시민 사이의 한층 더 엷어진 경계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회와 새로운 통제의 출현

정보화의 진전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참여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가능성과 더불어 기술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과 새로운 감시권력 출현의 위험성도 동시에 확장시킨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제어 자동화와 같

---

7) 캐나다 저널리스트인 나오미 클라인이 그의 저서 쇼크독트린(원제: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에서 사용한 개념이다. 나오미 클라인에 따르면, 쇼크독트린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민들의 공포를 이용해 지배세력을 위한 체제를 강화시키는 '재난자본주의'의 수법이다. "쇼크 독트린의 신봉자들이 보기에, 마음껏 그릴 수 있는 백지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구원의 순간은 홍수, 전쟁, 테러공격이 일어난 때다."; 나오미 클라인, 김소희 옮김, 쇼크 독트린, 살림Biz 참조

8) '공정함'이라는 사회적 의제는 무한경쟁의 관점에서도, 사회적 연대의 관점에서도 공히 제기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극우행동주의가 이주자, 여성, 소수인종과 종교 등에게 '특권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9) 불안정한(precar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조어

은 디지털 혁명을 넘어,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 물리학 기술 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하여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바이오기술 등과 관련된 산업을 급진전시키는 양상을 띤다. 이 과정에서 실제현실과 가상현실, 사람과 기계, 사람과 동물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자연적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윤리성이나 공공성 문제, 혹은 기술발전의 우선순위나 선택권과 관련된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한편, 이런 융합(Convergence)과 연결(Network)은 빅데이터와 플랫폼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인 거대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몇몇 대기업과 국가가 장악하는 결과를 낳고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장악한 빅브러더, 즉 (시민)감시국가 혹은 (시민)감시기업의 출현을 야기할 수 있다. 영화에서만 보던 '마이너리티 리포트[10)]'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과거적폐의 하나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과 군의 댓글 사건은 단순히 과거로의 후퇴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 감시사회의 한 단면일 수 있다.

흔들리는 분단체제와 군사주의로 인한 비용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난관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말기적 퇴행이나, 사회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탈산업화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세계체제의 일반적 문제들이 그 한반도적 표현이랄 수 있는 분단체제를 통해 더욱 왜곡된 형태로 남과 북에 발현되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위협과 공포를 과장하여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는, 적대적이면서도 상호의존적인 분단체제 아래서,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통제받지 않는 군사주의와 체계적인 국가폭력이 결합한 극단적인 약탈적 특권체제가 형성되고 재생산돼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전체제가 지닌 불안정성이 극도로 심화되어 왔다. 지난 한 세대 동안 분단체제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진 반면, 별다른 공존과 협력의 전망 없이 적대와 대결의 관성이 한반도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보수정부가 집권한 9년여 동안 북에서는 핵무장으로 체제 생존과 국제적 위신을 확보하려는 군사주의가, 남쪽에서는 "3일이면 충분하다"는 식의 위험한 흡수통일론과 '불량국가개조론'이 각각 득세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 65년간 이어져온 냉전과 정전상태가 열전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놀라울 지경이다.

이 극단적인 대결구도가 위험한 이유는 단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역대 보수 정권과 보수세력들이 과장해온 북한에 대한 공포는 최근에 와서는 북한에 대한 우월주의와 기묘하게 연결되고 있는데, 이 우월주의는 한반도 문제에서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이중기준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한다. 나아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것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심지어 종북, 동성애, 이슬람 같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대상들까지 한데 묶어 차별하고 배제하는 맹목적 극우주의에 자양분을 제공한다.

비록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대치상황이 해결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국가정보기구의 남용가능성도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분단체제의 군사주의와 전쟁정치에 내재된 차별과 혐오, 배제와 폭력은 박근혜 식의 '점진적인 쿠데타[11)]'를 언제든 다시 소환해 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나 남한 내부의 '종북몰이'로 질식되는 것이 북한의 독재체제나 군사주의가 아니라 도리어 남한사회의 민주적 다양성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

10)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2년 영화. 2054년 워싱턴, 치안 시스템인 프리크라임은 범죄가 일어날 시간, 장소, 범인을 미리 예측, 미래의 범죄자들을 체포한다.

11) 백낙청, 신종쿠데타가 진행중이라면...., 창비주간논평, 2015. 12. 31.

다른 세상을 향한 새로운 우선순위

요약하자면, 촛불시민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시민들의 자구적 행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불안정하고 위태롭고 자유로운' 다중, 기존의 계급이론이나 사회적 분류로 쉽게 설명되지 않는 자각된 '나'들이라는 점에서 강점과 동시에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이들은 갈수록 제 역할을 못하는 국가와 정치체제, 그리고 국가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되어 가는 특권체제와 양극화에 분노하여 행동화하고 있지만, 종종 차별과 혐오라는 손쉬운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집단적 행동의 방향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그것이다. 이들의 지닌 행동성의 특징, 그 강점과 약점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탈산업화라는 지구적 변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정전체제의 불균형과 불안정성으로 인해 분단권력의 강퍅함에 대한 대중적 반발과 저항이 격렬하지만, 동시에 차별과 혐오가 분단 상대방에 대한 적대와 이중기준 적용에 편승할 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정치적 이변을 만들어내는 행동하는 시민들이 전통적인 이념이나 조직으로부터 한 층 더 자유롭고, 국가나 특권층이 강요하던 우선순위와는 명백히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물과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를 지배해왔던 이념이나 가치--'부국강병富國强兵'과 '멸사봉공滅私奉公'을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반공주의는 전쟁 같은 일상을 사는 시민들에게 호소력과 매력을 잃어가고 있음이 점점 더 확연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냉전시대에 고안되고 개발연대와 87년 체제를 지배해왔던 발전·안보국가의 환상은 극적으로 깨어지고 있다. 과거의 '국가 중심 국가'의 자리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향한 열망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대자보 열풍에서, 그리고 "국가는 없었다"는 탄식으로 맞이한 세월호 참사에서 이미 시대정신이 '멸사봉공'에서 '자중자애'로, 국가발전과 안보에서 돌봄과 안전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천명되고 선언된 것이다.

나는 여기에 새로운 '형성'의 기초, 서로 주체성이 발현될 맹아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상봉 교수의 발제에서 언급된 새로운 주체의 이념이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상대적으로 놓치고 있다고 보아 장황하게 필자의 기존 글을 인용하였다.

촛불 이후, 정치적인 것들의 정치적 귀환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1. 혁명 그 이후, 여성은 어디에?[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이끄는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서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23회에 걸쳐 6개월 이상 지속하며, 약 1,700만명(연인원, 주최측 추산)의 다양한 일반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 여성 유권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탄생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촛불집회를 통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되었고, 최초로 탄핵되어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여성 대표성의 공백에서 등장한 박근혜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서 일반 유권자의 인식에 '여성'이라는 기호를 성공적으로 침윤시켰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여성'으로 잠식되었다. 더불어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발언과 이후 드러난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논란은 대기업과 전방위적 관료 집단이 연루된 초유의 국정농단과 조직적 부정부패를 '여성'의 문제로 전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여성'이 혁명 발단의 원인으로 지목된 또다른 사건이 된 것이다.

결국 촛불집회는 탄핵 이후 조기대선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촛불시민혁명"으로 명명된다(강우진 2017; 권진욱 2017). 촛불시민혁명은 1960년 4.19 혁명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1987년 6월 항쟁을 잇는 한국의 또 다른 민주화의 변곡점으로서 이미 역사의 궤도에 올랐다. 손호철(2017)은 "짧은 시간에 (단순히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행위" 라는 스콕폴(Skocpol 1979)의 혁명 개념에 빗대어 2016년 11월에 시작된 일련의 촛불 집회

1) 이진옥(2018)에서 발췌. "여성 정치와 페미니스트 정치의 사이에서: 광장 이후의 젠더 민주주의 구성을 위한 모색", 『기억과전망』 38호, 게재예정

와 그를 통한 정권 교체를 촛불혁명으로 명명하고, 근본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는 정권 교체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그 혁명은 현재진행형이라고 설명한다(손호철 2017, 92). 그런 점에서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JTBC와의 인터뷰 이후 한국 사회의 자장을 흔드는 미투운동은 촛불혁명의 현재진행형이자 정권교체만이 아닌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혁명의 완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혁명의 여진이 여성에 의해 지속되는 반면, 혁명이 지나간 정치의 자리에 여성은 다시금 사라졌다. 18대 대선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등 네 명의 여성 후보들이 박근혜 후보와 경합했던 반면, 19대 대선에서는 15명의 후보 중 여성은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뿐이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모두 남성을 공천했고, 미니총선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상이 되는 12개 지역구에 공천한 11명의 후보들도 모두 남성이었다. 이는 위에 언급한 4월혁명의 결과와 유사하다.

> 1960년 4월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3.15부정선거가 결정적이었지만, 윤정란(2010)은 이를 초래한 중대한 원인 중 하나를 여성들에서 찾는 당시의 분위기 를 상기시킨다. 박마리아와 프란체스카를 비롯한 '사모님족'을 이승만 정권 부패의 원인으로 보며, 여성의 사치와 허영이 정치 사회적인 부패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여성 정치참여망국론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7.29총선에서 박순천이 유일하게 여성으로 당선된 결과에 대해 여성계는 여성정치참여를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를 그 원인으로 짚었다(윤정란 2010, 256~260).

이런 현상은 급격한 권력 교체의 시기에 흔히 발견되는 젠더 정치의 속성이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후 복원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정치권력이 남성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혹자는 재남성화(remasculinization, Craske, 1993)라고 명명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남성주의(masculinism)의 복원이라 칭한다. 그 이유는 아래에 상세히 설명하듯이, 남성주의는 그것과 대쌍적인 관계에 있는 여성주의(feminialism)와의 관계 맺기의 재조직화에서 읽혀야 하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상상이 열리는 그 시공간에서 여성과 남성, 성소수자,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은 동등하게 참여했으나, 정치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확인했듯이 권력은 남성에 의해 독점된다. 그리고 2017년 대선 과정에서 가장 정치적인 장면이었던 성소수자 인권 변호사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마주치는 순간은 여성과 젠더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정치적인 것으로 자리하는 바로 그 징후였다.

2. 혁명의 젠더 정치[2)]

: (남성주의) 정치의 복원과 (여성주의) 정치적인 것의 재생

스콧은 젠더를 "섹스 사이에 인지된 차이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의 구성적 요소"이자, "권력 관계를 의미하는 일차적인(primary) 방식"이라고 정의한다(같은 책, 42), 사회적 관계의 조직이 변화할 때 (그 변화가 항상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

2) 이진옥(2017)에서 발췌. "대선과 젠더 정치: 18대 대선과 19대 대선의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7권 2호: 95~137.

지 않지만) 항상 권력의 재현(representations)의 변화와 상응하며, 그 권력 재현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에 따라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나 젠더화되어 있다. 젠더는 현실 정치에 상반되는(antithetical) 것처럼 보이거나, 정치적 역사에서 여성과 젠더를 소재로 삼거나 그에 대한 질문조차 포함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존재해왔다(같은 책, 42, 46). 그러나 스콧은 권력의 개념이 항상 젠더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은 아니나, 서구의 정치적 역사는 젠더를 차용하여 권력의 의미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가능해왔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18, 19세기 프랑스 혁명은 몇 세대에 걸쳐 (새의 몸과 여자의 얼굴을 가지 신화 속의 괴물인) 하피나 (뱀으로 된 머리칼을 갖고 있으며 눈을 마주치면 돌로 변한다는 신화 속의 여자 괴물)로 그려져 왔으며, 프랑스 혁명에 비판적이었던 에드먼드 버크는 이를 "지옥의 복수의 여신, 가장 사악한 여성의 왜곡된 형상"으로 묘사했다(Hertz, 1983: 27, 스콧, 2001: 220에서 재인용). 즉, 사회적 대변혁기에 보수정치 담론 안에서 남성성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연관되어 사회적·경제적 권력에 실재하는 것들은 성적인 팬터지와 결부되어 재현된다. 젠더는 정치 권력이 사고되고 정당화되고 비판받는데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들 중 하나이며, 남성과 여성의 대립적 의미를 구축함으로써 "젠더 관계의 이원화된 대립과 사회적 과정은 모두 권력 그 자체의 의미가 된다"(Scott, 1999: 48-9). 필연적인 것은 아니나, "오래된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새로운 것들은 존재로 불러오는 거대한 정치적 소요는 정당화의 새로운 형태를 찾는 방식으로 젠더의 용어(와 조직)을 개편한다"(Scott, 1999: 49). 그와 유사하게 민주주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남성주의(masculinism)[3]의 복원과 동반된다는 것이 다수의 사례에서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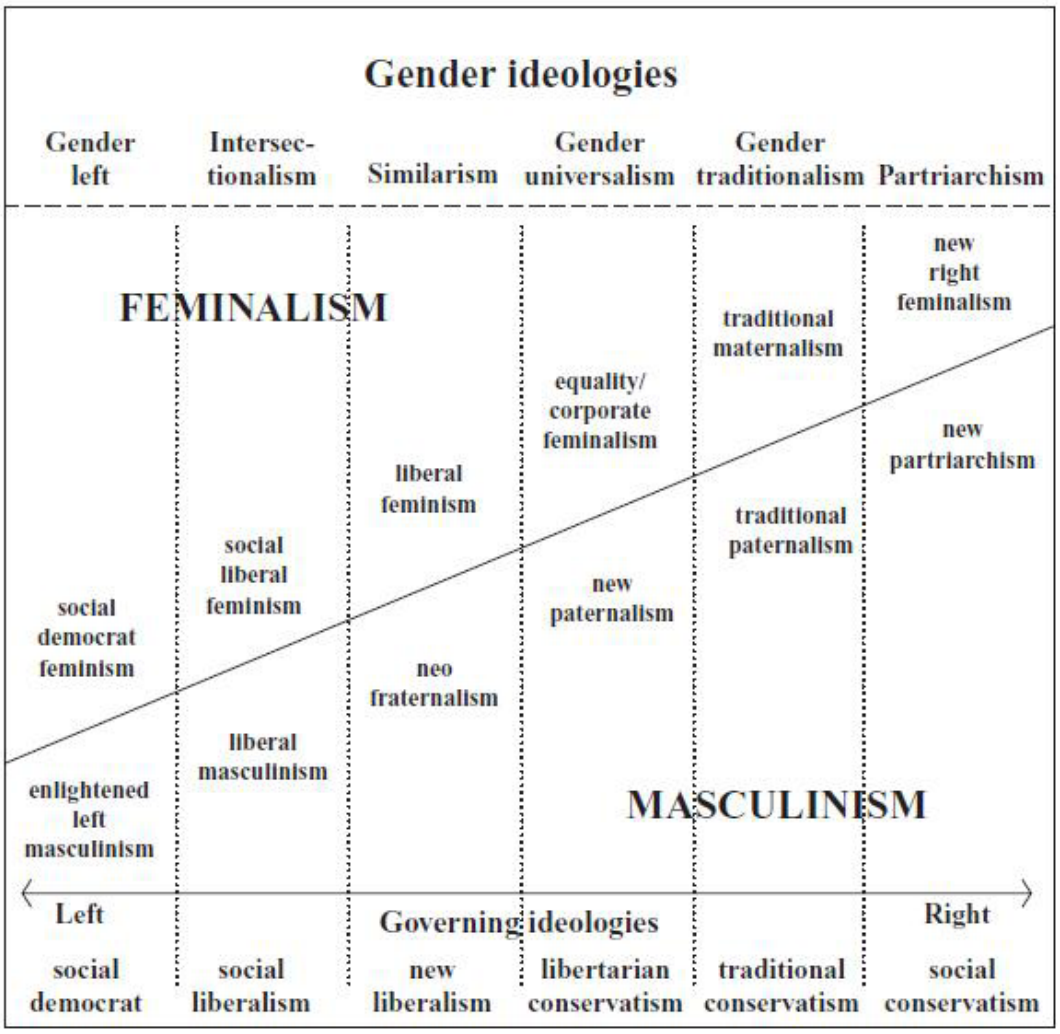
일례로 구 공산권인 동유럽에서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존의 젠더 질서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은 공사 분리를 재구축하고 그를 통해 공적 영역을 남성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Watson, 1993). 이런 흐름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확인된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는 다시 선거 정치와 정당 정치로 회귀하면서 남성 중심적 권력이 재배치되며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주변화로 나타났다(Craske, 1998). 그러나 남성주의(masculinism)는 남성 독점적 지배 구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990년대 동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에서 확인한 것처럼, 민주주의는 여성 할당제와 같은 평등 정책의 실현을 통해 여성에게는 부분적인 참여와 공간이 허용된다. 즉, 이 두 지역의 민주화 과정에서 발견된 남성주의의 발흥은 여성주의[4]와 상응하고 경합하며 일부 여성의 포함과 다수 여성의 배제를 통한 남성중심적 정치 질서가 공고화되는 과정이다.

이에 두어스트-라흐티는 남성주의(masculinism)를 남자 인간과 관련된 것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하며, 이는 인간 남자에게 이점을 제공하고 젠더 평등의 선택을 유리한 선택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Duerst-Lahti, 2008: 183). 그녀는 미국 정치를 분석의 사례로 들며, 남성주의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스펙트럼에서 신가부장주의(new patriarchialism), 전통적인 온정주의(traditional paternalism), 신온정주의(new paternalism), 신형제주의(neo-frateralism), 자유주의적 남성주의(liberal masculinism), 계몽된 좌파 남성주의(enlightened left masculinism)의 형태로 그 모습을 달리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남성주의의 대쌍적 관계로서 여성주의(feminialism)을 정의하면서, 이 여성주의의 범위에는 신우파 여성주의(new right feminialism), 전통적 모성주의(traditional maternalism), 평등/기업형 여성주의(equality/corporate feminialism),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3)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따르면 남성주의는 "남성 권리의 옹호; 전형적인 남성이라고 간주되는 의견과 가치 등에 대한 고수와 장려; (좀더 일반적으로) 반페미니즘, 남자다움(machismo)의 과시"라고 정의된다.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3r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 이 논문은 이 맥락에서 여성주의는 feminism과 구분되는 feminialism을 지칭하는 반면, 정의당은 페미니즘보다 '여성주의'로 논쟁을 전개한 만큼 정의당의 맥락에서만 여성주의라고 기술한다.

(liberal feminism), 사회자유주의적 페미니즘(social liberal feminism) 및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social democrat feminism) 등의 형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같은 책 174-177, 아래 그림 1 참조). 즉, 젠더 이데올로기를 정치 이데올로기와 유사한 넓은 이념적 지형과 경합하는 대쌍적 관계의 남성주의와 여성주의의 결합으로 새롭게 정의하고자 시도한다. 두어스트-라흐티는 일례로 가장 우편향의 사회 보수주의 정치 지형에서 남성주의는 새로운 가부장제로서 그와 신우파 여성주의에 대한 우위를 점하는 대쌍적 관계의 젠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반면, 가장 좌편향의 사회 민주주의 정치 지형에서는 사회 민주주의 페미니즘이 계몽된 좌파 남성주의의 우위를 점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구축한다고 설명한다. 그녀의 통찰력은 정치 질서의 남성주의적 구축이 여성의 완전한 삭제 또는 지배를 의미하기보다 젠더 질서가 구축되는 방식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정치 이데올로기와 상응하며 다른 형태의 여성주의의 구축과 동반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5)]



〈그림 1: 미국 정치의 젠더 원이데올로기(protoideology), (Duerst-Lahti, 2008: 176)〉

5) 이진옥(2017)에서 발췌. "대선과 젠더 정치: 18대 대선과 19대 대선의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7권 2호: 95~137.

3. 정치적인 것들의 정치적 귀환

발표자는 촛불혁명은 "근대성과 전근대성의 이중성"을 가진 모순적 힘을 지적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에 함의하는 바를 "마지노선 민주주의"로 정의한다. "아래로는 최소한의 근대적 민주주의, 곧 선출된 대표가 대표-책임의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치하는 민주주의"를 마지노선으로 삼았으나, 동시에 근대적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최대한의 상태, 곧 보통선거권과 정기적 선거에 의해 제도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또하나의 마지노선"으로 삼았고, 그 이중성으로 인해 "시민들은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구사항도 관철시키지 않은 채로, 혹은 아예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로 한순간에 광장에서 후퇴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시민들이 최소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광장에 나섰고 최대한의 민주주의가 관철되었을 때 광장에서 일시에 후퇴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시민들은 이미 광장에서 상이한 명분과 이해관계를 지녔으나, 공통의 "박근혜 퇴진"을 외쳤고, 탄핵 이후 조기대선이 치루어지는 상황에서 광장을 지킬 명분이 없었다. 그리고 광장에서도 대선 과정에서도 이미 상이한 촛불의 힘들은 드러났다. 광장에서 성희롱과 여혐발언에 대한 분투의 과정이 존재했고, 수구세력은 "종북"이 아니라 "동성애"로 담론적으로 결집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공간을 마련했다. 그 결과 촛불혁명 이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혁명을 낳은 발표자의 개념을 따라 "최소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최대한의 민주주의"가 만들어 온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다시 말해, 발표자가 의존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상이 여성과 성소수자 운동의 관점에서는 달랐으며, 그 결과 광장에서 이미 다르게 존재해왔던 그들은 "새로운" 주체로 명명된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혁명 전후 극우 기독교 세력과 '가짜뉴스'가 모든 수준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6]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발표자의 사회적 문제들과 과제로 언급되지 않는다. 기독교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는 난민 및 무슬림 등 외국인혐오증은 난민 반대 청원에서 보듯이 위력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으며, 동성애와 AIDS에 대한 가짜뉴스는 이들의 전국 곳곳에서 열린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조직적 훼방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성평등 조례안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 대표성의 위상을 약화시키는데 기여한다. 발표자가 말하는 촛불혁명의 근대성과 전근대성의 이중성은 발표자가 이미 갖고 있는 근대성에 천착하여 구성된 것 아닐까? 더 나아가 최소한/최대한의 민주주의는 구별되기 보다 상호구성적이며,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에서 이미 탈각된 정치적인 것들이기에 이미 그 민주주의 개념을 다시 쓸 것을 요구한다.

하므로 미투운동이 촛불혁명 이후에 그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기억할 것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운동은 대한항공 등의 촛불시위로 이어졌으며,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김지은씨는 "노동자 김지은"이고 싶다는 투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7] 여성과 동의의 문제를 고려해야만,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의 민주적 재구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적인 삶의 동시적 재구성을 위해 전적으로 충분한 논변을 갖게 된다"(144쪽). "비록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

---

6) 일례로 헌법 15조가 담긴 자문위안이 개헌특위에 제출된 최초 시기 이후, 2017년 7월 27일 '동성애·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창립한 후, 조직적인 성평등 개헌안에 대한 공세 이후 성평등 개헌의 요구안은 보수 기독교 세력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증발되어버렸다. 이들은 '성평등'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함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하고 혼인 및 가족에서 개인의 평등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수순이며, 하기에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개헌특위에 받아들여져 8월 말부터 계획된 국민개헌대토론회 자료집에서 성평등은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뀌고 자문위의 성평등 개정안은 삭제되었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 국민개헌대토론회는 동반연 측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장악되었고 이로써 토론회는 반(反)성평등, 반(反)동성애의 성토장이 되었다. 이진옥(2018) "개헌의 젠더 트러블: 양성평등이 투쟁의 종착지가 된 성평등 개헌의 역설", 『문화/과학』 94호: 147~175.

7) "[기고] '노동자 김지은'이고 싶습니다.", 〈노동과 세계〉 2018년 9월 20일.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8264

지는 않지만, 두 영역들이 미래의 민주주의적 여성주의 사회적 질서와 상호 관련이 있고 필수적인 차원"이며(218쪽), 민주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은 "가부장적-자유주의 이분법과 대립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삶에 대한 변증법적 관점"을 시사한다(221쪽). 페미니즘 없이 "민주적 형태의 사회적 삶이 어떨 것인가 상상하기는 어려"우며, "과거로부터 배운 교훈은 페미니즘이 아닌 '민주주의' 이론과 실천이 단지 지배의 근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는데 복무하고, 따라서 민주주의가 구현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상과 가치를 조롱할 뿐"이다(346쪽).[8] 다시 말해, 저자가 의존하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 그 자체가 낡은 공사 이분법 위에 서 있으며, 저자의 촛불혁명 이후의 과제에 대한 해석과 해법에도 불완전한 논리로 귀결된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민주주의의 개념이 민주주의와 정치 발생의 상이한 수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저자가 지적하는 비/제도권의 정치와 "사실상의 대표(virtual representation)을 넘어 실제의 대표(actual representation)를 어떻게 구현할 것"9)에 대한 고민은 필자도 공유하고 있는 바이다.

> 이를 위한 개혁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에서 동시적으로 요구된다. 먼저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권 민주주의에서는 의회, 사법부, 행정부, 정당 부문의 개혁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비제도권 민주주의에서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주민참여, 다양한 시민의회 및 공론화의 실험,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 등이 수단이 될 수 있다.
>
>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제도권과 비제도권 민주주의의 발전이 경쟁적으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개혁의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의 미발전이 다른 부분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가령 주민의 직접참여 확대의 제도화를 기존의 지방의회가 저지한다든지, 반대로 의회나 정당의 발전이 포퓰리즘에 의해 방해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체의 모순이다. 현재 요구되는 정치적 과제가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나서 새롭게 요구되는 것인데, 그 정치적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정치적 주체들은 87년 민주화 세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1.0의 주체들에게 민주주의 2.0의 과제가 주어진 격이기 때문에 의지와 주체의 측면에서 부조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

발표자가 말하는 두 가지 문제는 사실 복합적이다. 주체의 모순은 제도권과 비제도권의 정치 영역의 주체가 분할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시 말해 제도권의 정치권력이 87년 민주화 세대에 의해 독점되고, 저자가 말한 "새로운" 주체들은 비제도권에 비자발적으로 머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의 대표"(실질적 대표성)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대표"(기술적 대표성)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즉, 여성 대표성 확대에 대한 주장은 여성의 수적 증가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여성의 이해는 상충되고 경합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적 요구는 여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일례로 노동, 보육, 돌봄, 교육 등의 '사회적' 의제 등이 곧 여성의 이해이며, 낙태죄 폐지 및 불법촬영 근절 등의 여성의 이해는 건강권과 안전의 보편적 문제이다. 그리고 보다 많은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설립 완화,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 등의 정치개혁공동행동의 요구가 실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여성의 제도정치 진출(기술적 대표성)은 규정된 내용(실질적 대표성)을 지향하기보다 정치 내용의 생산 과정의 규칙(형식적 대표성)을 바꾸는데 주목한다. 이는 필자가 촛불 이후 사회경제적 과제들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과제에서 가정하고 있는 정치적 공간과는 다른 수준과 대표성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한다는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

8) 캐롤 페이트만(2018), 『여자들의 무질서』, 이평화·이성민, 도서출판 b.

9) 저자의 virtual representation과 actual representation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제시되지 않아, 이를 핏킨의 각각 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과 실질적 대표성(substantive representation)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한다.

돌봄적 혁명, 정원을 가꾸는 마음으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오늘공작소 대표

우선 촛불혁명 2주년 학술토론회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발제문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민중 역사에서 희망을 찾으며 주체적 시민의 새로운 나라 형성을 강조하신 김상봉 교수님의 논의, 모두가 모두를 돌볼 수 있는 돌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대안을 제시해주신 윤자영 교수님의 논의, 현재 한국의 근대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정치적 주체와 '정치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필요하다는 이관후 교수님의 논의는 거시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회의 전환을 김상봉 교수님은 '새로운 나라의 설계도'로, 윤자영 교수님은 '근본적 개혁'으로, 이관후 교수님은 '근본적 변화'로 언급해주시며 사상과 제도, 삶의 근본적 개혁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세분 모두의 발제문을 읽고 제가 느낀 점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갈음하려 합니다.

얼마 전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한 것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국내 외상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문제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92년도에도 똑같았고요. 한발짝도 못나갑니다" "어디 한가지가 문제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디 한군데만 풀어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외상의료체계의 문제도 중요했지만, 이 센터장이 묘사한 한국 사회의 현실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기에 주목받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 가장 긴 노동시간,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높은 우울지수를 보입니다. 선진국을 향해 급속도로 압축 성장했지만, 지금은 먼저 망해가는 나라, 선망국(先亡國)[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의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1) 연세대 명예교수 조한혜정이 제안한 단어다.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정곡을 찌르는 구호였습니다. 고장난 구체제를 끌어내리고 새 사회를 부르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전근대로부터의 완전한 전환점을 찍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두 시대가 혼종되어 있는 '앙시앙레짐'이 형성되었다고 포착하신 이관후 교수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촛불혁명에서 터져나왔던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담론화, 제도화, 실체화하지 못한다면 미완의 혁명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상봉교수님께서 역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지만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보다 문제를 직시하는 힘에서 변화가 추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혁명을 완성시키는 중심에는 김상봉 교수님이 말씀하셨듯 새로운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경제나 정치 너머에 있습니다. 존재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상상력이 절실합니다.

시간의 축

한국사회의 정치/사회 현안의 속도는 매우 숨가쁩니다. 한국의 고질적 병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매몰 비용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시민공론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6월 27일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발족키로 발표하고 7월 24일 9인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한 달간 공론화사업 과정을 설계하고, 8월 24일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확정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의 숙의 기간은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33일이었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숙의 자료집, 이러닝 시스템을 통해 교육과 질의응답 등을 받았다. 한국에서 처음 실시한 시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인만큼 의미있는 시도였습니다만 치명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의 사회적 합의가 1순위 목표처럼 보입니다. 이후 첫번째 국가적 숙의 민주주의 사업은 한 달 만에 설계되었고, 첫 공표 이후 넉 달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속도 속에서 한 나라 국민들의 숙고가 과연 가능합니까? 시민참여단은 결국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사업이었으나 국민적 논의도 일어나지 않았고, 남겨진 가치 있는 논쟁은 적으며 한국 탈핵 운동은 정체되었습니다. 정신없는 속도와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분법적 논의체계는 공론장의 공론장다움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기반으로 짧은 시간에 압축 성장한 한국의 가장 큰 과업이 있다면 저는 시간의 축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을 지체(Lateless)하더라도 간극이 있는 존재끼리의 정치 과정을 지난하게 세워나간다면 그 동안 지워졌던 소수자, 다양성, 합의의 정치, 협력, 이해, 고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네덜란드에서 시작됐고 현재 여러 유럽국가들에서 실행하고 있는 지속가능전환 사례를 주목해볼만 합니다. 여기에서 전환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한 세대(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떤 사회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점진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런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을 전환관리라고 하는데 다수준 관점, 초학제간 접근을 기반으로 합니다.[2] 전환장이라는 전환실험 공간을 만들어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필요

2) 안정배·이태동, 『도시의 에너지 전환 분석』, 2016

한 논의와 학습, 평가, 개선 등등을 진행합니다. 전환 수준을 도시 정책 수준의 니치, 중앙정부 정책 기조 수준의 레짐, 전 지구 혹은 분야적 수준의 경관으로 나누어 각 수준에서의 혁신과 상호성을 고려합니다. 공무원과 정책결정자들 외에도 과학기술자, 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 관련자들이 참여합니다. 참여자들은 전환의 의미, 그 필요성과 문제의 구조 등 학습과 숙의를 통해 공감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듭니다. 그를 바탕으로 2, 30년의 전환 비전과 이를 목표로 하는 전환경로를 설정합니다. 이후 이를 실험할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합니다. 그리고 전환 실험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전환실험에 반영합니다. 현재는 레짐의 변화 추동까지 이끌어내 벨기에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녹지관리, 녹색 순환 경제, 신산업정책 등 13개의 전환과제를 선택하고 전환관리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3)]

이 실험은 우리에게 다양한 영감을 주지만 그 중에서도 문제 접근 방식에 시간이라는 축의 존재가 인상적입니다. "지속가능한 주택과 건축물을 위한 플랑드르 네트워크" DoWoBo 프로젝트는 문제 구조를 파악하고 2030 비전과 프로젝트 경로를 설정하는 데만 2004년~2006년 2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또 다른 폐기물 정책 실험인 Plan C는 앞선 DoWoBo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는데도 전환경로를 정의하고 전환 실험안을 짜는데만 또 2006년~2008년 2년을 썼습니다. 이후 실험프로젝트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전 과정에서 다시 평가와 보완 설계 과정을 거칩니다. 지속적이고 느린 속도 속에서 오히려 다각도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성공적인 니치 사례들은 레짐의 근본적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전환관리 참여자들이 고려하는 시공간은 30년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라는 전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나타날 다른 존재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인간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는 시공간 안에서 이분법적 구분은 무력화됩니다.

거리로 뛰쳐나와 하루아침에 세상을 뒤짚는 것이 전복적 혁명이라면 긴 시간을 들여 숙고하고, 실험하여, 전환하는 이것을 돌봄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시도들을 정치권에서 할 수 없다면 시민사회에서라도 진행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재들의 재위치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분위기에서 수십년 간 한국 사회를 관통해온 반공이데올로기는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 혹은 접근법은 그대로입니다. 남/북 갈등의 양상이 줄어들자 그 자리를 남/여, 자국민/이주민, 청년/노인으로 나누는 정체성의 정치가 등장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치는 바뀌지 않았고, 시민 개인이나 집단 삶의 문제 해결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닌 남의 편, 적으로 간주되는 집단에 대한 비판과 갈등의 구도가 확대, 재생산되는 듯 합니다. 이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는 왕에게 읍소하는 신문고이자, 성난 마녀사냥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의 이재용은 왕도 건들이지 못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도 청원하지 않지만 어젯밤 일어난 살인사건 용의자나 페미니스트를 처형하라고 하는 청원은 금새 20만명의 동의를 만듭니다. 권력에 호소하게 만들고, 그 변화의 여부는(실질적 변화도 아니지만) 권력이 시혜를 배푸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허상적 제도를 브랜딩 수단으로 쓰는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

3) 이은경,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전환 정책』, 2014

다름은 축복입니다. 주체적 개인 간의 정체성 경쟁이 아닌 김상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만남'에 절실하게 공감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개인이지만 분명히 현존하는 불평등함 속에서 '기계적 균형'을 찾지 않는 자세는, 돌봄의 태도와 연결되는 듯 합니다. 여기서 윤자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을 '기본적인 시민적 역할로 재규정'하는 것은 노동의 영역이나 권리적 측면을 넘어 시민성의 속성으로 작용하며 김상봉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온전한 만남'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민, 국가, 자연, 개인 주체, 정치, 사회, 관계 등 존재들의 재위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개인간의 정체성 경쟁이 아닌 횡단의 정치가 이루어질 때 시민은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닌 주체로서 함께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

눈 앞에 놓인 실질적 과업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현 시점에서 우선순위를 두자면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을 정원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 정원에는 크고 작은 나무와 이름 모를 꽃과 풀, 동물, 곤충들이 서로 얽혀 살아갑니다. 하나의 종으로만 구성된 생태계는 위험합니다. 아주 작은 위험에도 바닥까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 생태계를 정원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두 그루의 큰나무만 덩그러니 있는 풍경이 아닐까요. 매 선거 때마다 4당, 3당 체제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얼마 못 가 결국 두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양당체제가 공고히 이어졌습니다.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와 불공정한 선거법은 방파제가 되어 새로운 물결이 기득권을 넘어서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민중이 '마지노선 민주주의'를 통해 전복시키지 않는 이상 기득권 정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관후 교수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대표인가 하는 메타적 질문을 넘어, 이를 재현한다고 할 때 표상적 정치인의 대중적 등장이 필요한데 현 선거제도나 정치 문법 안에서 '실제의 대표'를 재현하는 정치인의 등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은 선거를 이기고 지는 게임과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체스나 장기처럼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1승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1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대적인 경쟁 구도로 가기 쉽습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여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어서 조작된 과반이 탄생하기 일쑤입니다.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치 카르텔도 여기서 탄생합니다. 지역구에서는 후보자들이 거대정당의 결정권자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연·학연·혈연을 위시하거나 돈과 권력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시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수는 대폭 늘리고 선거법, 정당법 내 독소조항을 없애야 합니다.

개헌에서는 그 동안 한국이 취급하지 않았던 비주류, 비인간의 가치들을 다뤄야 합니다. 주거권에서부터, 동물권, 지구법까지 이미 다양한 완성된 안이 존재합니다. 또한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아니라 입법권을 지방정부로 분산시키고, 양원제 도입,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다양한 형태의 안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원[4] 을 일궈나갈 때

한국 사회는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라는 87년 항쟁에서는 한가지의 이념 아래 모든 민중이 모여 혁명할 수 있었지만, 그런 변화의 형식이 현재에 맞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복잡해졌으며, 개인도 다양해졌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정원을 일궈나갈 때입니다.

총체성 속에서 이 안들을 조율하거나 새롭게 만들어내는 '설계도의 작업'을, 뛰어난 개인이 아닌 다양한 주체가, 서로를 부정하지 않고 측은지심과 호혜성을 지키며, 대립이 아닌 협력의 과정으로, 긴 호흡을 통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어른들께서 품을 내어주시지요. '선망국(先亡國)'을, '선망국(羨望國)'으로 바꾸는 작업에 시간을 낼 청년, 시민들이 있을 겁니다.

4) 아래의 책에서 가져온 말이다. 에릭리우, 『민주주의의 정원』, 20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www.kdemo.or.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7층
T.02-3709-7500 F.02-3709-7520